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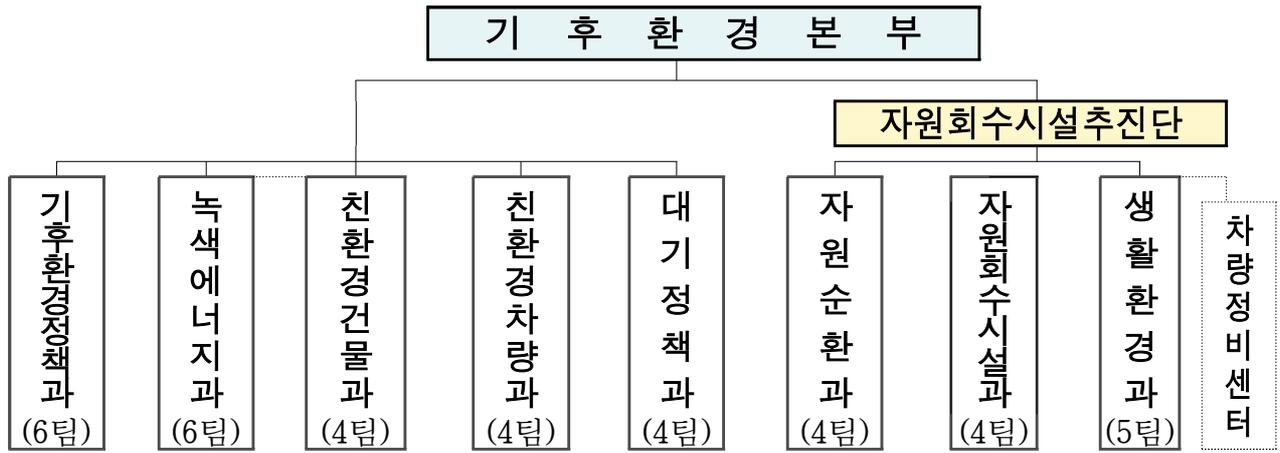
주요업무보고

2026. 2.

기후환경본부

I. 일반 현황

□ 조 직(1본부, 1단 8과 37팀, 1사업소)



□ 인 력 (’26.1.31. 기준 / 시간선택제 임기제 미포함)

구 분	계	일 반 직	임 기 제	관 리 운 영
정원 / 현원	261 / 259	238 / 236	14 / 13	9 / 10

□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

구 분	주 요 업 무
기후환경정책과	○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시행,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,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○ 녹색서울시민위원회, 기후환경 국제협력, 시민실천 운동, 환경교육 등
녹색에너지과	○ 에너지종합대책 수립 및 도시가스전력 관련 업무, 친환경보일러 보급 ○ 연료전지·지열·소수력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·보급에 관한 사항 등
친환경건물과	○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(총량제, 신고등급제) 운영, 건물에너지효율화 추진 ○ 건물효율화 융자사업 지원, 서울에너지닥터 운영, 환경영향평가 등
친환경차량과	○ 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○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, CNG마을버스 충전 격려금 및 LPG 신차 전환 지원
대기정책과	○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·추진, 대기질 관련 조사분석 및 연구 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,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
자원순환과	○ 수도권매립지 관리,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추진 ○ 재활용 분리배출 정책 추진, 사업장 폐기물 관리 등
자원회수시설과	○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○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
생활환경과	○ 청소대책 수립·추진,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계획 추진 ○ 도로청소 계획 수립·추진,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, 환경분쟁조정
차량정비센터	○ 특수 작업차량(청소, 수방, 제설 등) 정비

□ 2026년 예산 및 기금 현황

○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(본예산)	2025년(최종)	증감액	증감률(%)
계	327,769	366,344	△38,575	△10.5%
세 외 수 입	163,674	141,779	21,895	15.4%
보 조 금	144,465	150,286	△5,821	△3.9%
내 부 거 래	19,630	74,280	△54,650	△73.6%

○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(본예산)	2025년(최종)	증감액	증감률(%)
계	569,179	610,274	△41,095	△6.7%
정 책 사 업 비	451,475	518,382	△66,907	△12.9%
재 무 활 동	116,664	90,768	25,896	28.5%
행 정 운 영 경 비	1,040	1,124	△84	△7.5%

< 부 서 별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(본예산)	2025년(최종)	증감 현황	
			증감액	증감률(%)
기 후 환 경 본 부	569,179	610,274	△41,095	△6.7%
기 후 환 경 정 책 과	24,247	22,865	1,382	6.0%
녹 색 에 너 지 과	13,974	38,800	△24,826	△64.0%
친 환 경 건 물 과	11,600	13,646	△2,046	△15.0%
친 환 경 차 량 과	252,251	226,757	25,494	11.2%
대 기 정 책 과	45,133	50,733	△5,600	△11.0%
자 원 순 환 과	35,495	19,164	16,331	85.2%
자 원 회 수 시 설 과	167,103	209,797	△42,693	△20.4%
생 활 환 경 과	15,734	25,206	△9,472	△37.6%
차 량 정 비 센 터	3,641	3,306	335	10.1%

○ 기 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5년	증감액	증감률(%)
계	81,525	91,762	△10,237	△11.2%
기후대응기금	38,276	49,572	△11,296	△22.8%
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	43,249	42,190	1,059	2.5%

II. 정책방향

비전

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

목표

지속 가능한
자원순환도시

기후위기로부터
안전한 서울

미세먼지 없는
더 맑은 서울

핵심과제

자원순환도시

- ▶ 직매립 금지 제도 정착
- ▶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
- ▶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 확산
- ▶ 고품질 재활용 확대 등 재활용 체계 강화

기후위기 안전도시

- ▶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, 총량제 시행기반 강화
- ▶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
- ▶ 탄소중립 시민실천 확산

신재생에너지 보급

- ▶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
- ▶ 지열·수열 보급 활성화
- ▶ 민·관 태양광 확대
- ▶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

대기질 개선

- ▶ 4·5등급 차량 조기폐차
- ▶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
- ▶ 무공해 공사장 조성
- ▶ 초미세먼지 대책 추진
- ▶ 고농도 오존 특별대책 시행

쾌적한 서울

- ▶ 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
- ▶ 도시 청결도 향상
- ▶ 도시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

추진전략

- 처리기반 구축 및 감량·재활용 문화 선도
-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조성
- 자동차 탈(脫) 경유화를 통한 대기질 관리 강화

III. 주요 업무계획

1.

자원순환도시 서울 추진

1-1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

1-2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

1-3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

1-4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현대화

1-5 재활용가능자원 고품질 재활용 확대

1-6 음식폐기물 원천감량 및 시민 실천확산

1-7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운영 추진

2025년 사업평가

□ 그간의 성과

○ 직매립 금지 대응('26.1. 시행) 위한 생활폐기물 집중 감축 추진

증량제 폐기물
('24년 대비 113톤/일↓)

- (폐비닐) 전용봉투 1,428만장 배포, 약 273톤/일 재활용
- (커피박) 쏘 구 별도수거 참여, 약 20톤/일 재활용
- (현수막) 전국 최초 공용집하장 설치, 107톤/년 재활용
- ※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36개소 신규 발굴, 약 96톤 공공 처리여력 확보 효과

음식물류 폐기물
(전년대비 45톤/일↓)

- RFID 종량기 1,338대, 대형감량기 21대(임대) 보급

▶ 증량제('24년 3,018→'25년 2,905톤/일(추정)), 가정 음식물류('24년 1,812→'25년 1,767톤/일)

○ 다회용기 사용기반 확대로 1회용 플라스틱 1,445만건 감축

- 장례식장 빈소수(26→50개소), 잠실·고척야구장(38→54개소), 다회용기 배달(15→20개구) 확대
- ▶ 1회용 컵 988만건(누적 3,511만), 포장용기 457만건(누적 1,072만) 다회용기로 사용 전환

○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현대화로 공공 처리역량 확대

- (재활용) 광역시설* 건립으로 공공시설 이용 확대(16→19개구), 현대화(강남·중랑·강북)
- * 은평('25.5. 준공, 재활용 150톤), 강동('25.10. 준공, 재활용 70톤·음식물 360톤)
- (소 각) 현대화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·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(강남·노원)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○ 지속적인 감량·재활용 성과에도 불구하고, 직매립 금지 대응에는 한계

- 공공 처리기반 확충 없이는 기존 매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 예상

○ 생활폐기물 감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민인식 전환 및 참여 확대 필요

- 자발적 실천 구조의 한계를 고려, 인센티브 등 제도적 참여장치 마련

☞ 처리 인프라 확충과 감량 실천체계 고도화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

정책방향 및 성과 목표

□ 정책방향

- 직매립 금지 시행('26.1.)에 따른 안정적 이행 및 제도 정착
- 폐기물처리시설 확충·현대화를 통한 공공 처리기반 확대
-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및 재활용 강화를 위한 체계 및 문화 확립

□ 추진전략

안정적
처리기반

- ▶ 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추진
- ▶ 재활용시설(음식물 포함) 현대화로 처리효율·안정성 제고
- ▶ 예외적 직매립량 확보 및 신속 승인체계 구축

폐자원
관리강화

- ▶ 종량제봉투 속 폐자원(폐비닐 등) 고품질 재활용 강화
- ▶ 사업장폐기물 배출 등 관리 강화로 공공이익 증진
- ▶ 음식물류 폐기물 중·감량기 보급으로 감량 강화

시민실천
문화확립

- ▶ 시·자치구·시민의 공감 기반, 생활 속 감량 실천 확산
- ▶ 시민 생활권 중심, 다회용기 사용·분리배출 실천체계 조성

□ 사업목표

사업별	2025 (실적)	2026	2027
다회용기 이용건수	1,445만건	1,650만건	1,800만건
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발굴(누계)	1,136개소	1,250개소	1,350개소
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보급(누계)	27,754대	29,754대	31,254대

1-1

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

자원순환과장: 정미선☎2133-3670 자원순환정책팀장: 이효신☎3672 담당: 박경리,최유종☎3673

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('26.1.)에 대응하여 민간위탁 처리, 시설 정비기간 예외적 직매립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화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따른 비상 대응 및 처리 안정화
 - 민간위탁 처리 공백 최소화,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최대 확보
- 폐기물 발생·처리 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 상시 가동
 - 폐기물 발생·처리 현황, 임시 보관량 등 일일보고,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

□ 추진계획

- (민간위탁) **공공 소각용량 부족** 시설 이용 구 중심으로 **민간시설 활용** 처리
 - (처리현황) 공공소각 84,814톤(85.4%), 민간처리 14,481톤(14.6%)(1.1.~2.7.)

합계	공공 계	공공소각	공공매립	민간 계	민간소각	민간재활용
99,295톤 (100%)	84,814톤 (85.4%)	84,814톤 (85.4%)	-	14,481톤 (14.6%)	7,011톤 (7.1%)	7,470톤 (7.5%)

※ 민간처리량(14.6%)은 경기(13.2%), 인천(0.8%), 충청(0.6%) 순임

- (계약현황) 19개구, 35개 민간업체와 218,001톤/연 계약 및 처리중(2월 1주 기준)

※ 미계약 자치구(6) : 자원회수시설·기존 업체 활용 처리 중, 대정비기간 도래 전 계약 추진

- (공공처리) **시설 정비기간 예외적 직매립 추진, 소각시설 반입중지 최소화**
 - (소각증량) 대정비로 인한 반입중지기간 최소화('25년 168일→'26년 141일)
 - (매립확보) 대정비 집중기간(봄·가을) 민간처리 의존도 완화로 처리 안정화
 - ※ 예외적 직매립량, 반입조건 등 4자 논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

- (감량강화) 폐기물 **감량·폐자원 재활용 확대**로 공공시설의 처리부담 완화
 - (기반구축)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, 재활용 거점시설 설치 확대 등
 - (성과관리) 자치구별 감량 실적·참여도 평가 및 재정지원 등으로 실행력 확보

1-2

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

기후환경정책과장: 노수임☎2133-3510 기후환경정책팀장: 나홍주☎3512 담당: 장영상, 변년미☎3513

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관련, 안정적 공공처리를 위해 시·자치구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량사업 및 대시민 감량 실천 협조

□ 사업개요

- 인식개선 및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분리배출 실천 일상화
- 천만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/연간(10L) 줄이기
 - ⇒ 2년 동안 1개 자치구 발생량 120톤/일 감축(자치구별 연간 약 2.1% 감축)
 - ※ 자원회수시설 건립·현대화로 '33년까지 공공처리량 2,700톤/일 달성

□ 추진계획

-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한 **감량 실천 약속 및 공감**
 - (약속) 10만 시민 ‘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’ (2~4월)
 - [참여링크] <https://ecomileage.seoul.go.kr/green/oath.do>
 - (캠페인) 클린서울 감량 캠페인(2~11월), 종량제봉투 파봉 캠페인 실시(2~9월)
 - (교육) 초등학생 체험형 쓰레기 다이어트 교육(30개교, 4천명/ 3~12월) 등
- 시민과 함께 **생활 속 감량 실천** 추진
 - (시민) 354명이 참여하는 ‘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’ (2~6월), 명절, 지구의 날(4.22.) 등 월별 테마형 ‘감량 실천 도전 릴레이’ (1~12월)
 - (아파트) 단지별 재활용자원 배출량 늘려, 종량제 배출 감량(2~11월)
 - (청년) 탄.탄.한(탄소를 줄여서 탄탄한 미래로)서울! 우수 청년단체 시상(2~9월)
- 폐기물 감량을 위한 **시민 실천기반 구축**
 - (분리배출시스템) 시, 자치구 주관 행사 시 5종 수거함 반드시 설치(2월~)
 - (다회용기) 축제, 경기장 등 대규모 시민 행사시 다회용기 사용 확대(2월~)
 - (재활용 거점시설) 단독주택 밀집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거점시설 도입(3월~)
 - (제로마켓) 민간 제로마켓(1천개) 및 자원회수 거점(100개) 조성 활성화('26년~'27년)

1-3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

자원순환과장: 정미선 ☎2133-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: 송미현 ☎3695 담당: 권형태 ☎3688

생활 속 1회용품 다량 사용처 발굴 및 다회용품 사용기반을 마련하고, 친환경 소비 습관 확산을 통해 생활폐기물 원천적 감량 실천 협조

□ 사업개요

- 시민 생활 분야 1회용 플라스틱(컵, 포장용기) 폐기물 감량 추진
 - (거점확대) 다중이용시설·배달 등 다회용기 거점 확장으로 1회용품 감량 효과 제고
 - (우수인증) 다회용기 도입·운영 우수 기관 혜택 부여로 사업 홍보 강화
- 사업예산 : 5,305백만원(국비 50%)

□ 추진계획

- (장례식장) 대형병원 중심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및 지원 인프라 확충
 - 다회용기 공급 서비스 현재 5개 장례식장(50개 빈소) 지원 + '26년 신규 4개소 목표
- (다중이용시설) 경기장·테마파크·복합공간 등 다중이용 신규 거점 발굴
 - (경기장) 잠실·고척 야구장 → '26년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다회용기 도입 시행
 - (복합시설) 놀이공원, 상업·문화복합공간 중심 '1회용품-free' 적용 모델 개발
- (음식배달) 서울 25개 전 자치구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시행
 - (현재) 20개구 + ('26년) 강북·도봉·노원·금천·구로 5개구 추가
 - 프랜차이즈·인기 매장 참여 유도로 정책 노출 및 시민 인지도 향상
- (인 증) '서울형 다회용기 거점 인증제(가칭)' 도입,
사업자·소비자 인지도 제고
 - 장례식장, 식음료매장 등 다회용기 운영 우수사업장 대상 인증
 - 표창·인증표지 수여, 홍보 등 친환경 경영 참여 우대



<인증 표지 예시>

1-4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현대화

자원순환과장: 정미선 ☎3670 재활용기획팀장: 조명환 ☎3695 담당: 최용진 ☎3692

선별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공공 재활용 인프라 확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낙후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재활용폐기물 공공처리 기반 강화
- 市 안전·근로환경 개선 집중지원으로 유사 안전사고 예방
- 사업예산 : 14,403백만원(현대화 10,511, 안전·근로환경 개선 3,892) ※ 구비 별도

□ 추진계획

-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**노후시설 대상 현대화** 사업 지원
 - (중구(33억)·영등포(72억)) 시설용량 각 10톤 증설, 광학선별기, 수선별실 리모델링 등
 - (강남) AI 기반 로봇선별기 도입, 환기·제습·냉난방 설비 설치 등 ※ 구비 22억

※ 서울도시금속센터(SR센터) 현대화 : 설계용역(~'26.9.), 공사('26.11.~'28.6.)
- 처리용량 확대(5,000톤/년→7,800톤/년), 쏘 공정 실내화, 시설 견학·교육 강화 등

- 안전·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**설비보강 및 컨설팅** 강화
 - 안전 및 환경개선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(12개 재활용시설, 39억)
 - ▶ 소방(피난·소화시설, 9억)·산업안전(비상정지스위치 등, 25억)·근로환경(환기시설 등, 5억)
 - 시·구·전문가 합동 안전점검(5월) 및 시설 간 **교차견학**(10월) 정례화



(선별시설) AI 선별로봇 도입



(선별시설) 자동정지 안전장치



(SR센터) 현대화 조감도

1-5

재활용가능자원 고품질 재활용 확대

자원순환과장: 정미선☎3670 재활용기획팀장: 조명환☎3695 담당: 박은영,김승미,오우곤☎3735

종량제봉투 속 재활용가능자원 배출·수거·선별 개선을 통한 고품질 재활용 확대로 생활폐기물 감축 및 직매립 금지 대응

□ 사업개요

- 폐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성 제고
 - 페비닐, 폐현수막, 커피박, 폐봉제원단 등 배출·선별-재활용 쉼 단계 고품질 자원화
- 사업예산 : 2,284백만원(분리배출 확대 1,657, 폐자원 재활용 627)

□ 추진계획

- (페 비 닐) **기업·가정 연계 분리배출 참여 정착, 열분해 전환 추진**
 - (민관협업) ('25년) 5개 프랜차이즈 최초 협업 → ('26년)패스트푸드·편의점 등 협력 확대
 - ※ 남대문시장 등 주요 상인회와 연계, '전통시장 분리배출 선도모델' 구축·확산
 - (참여확대) 분리배출 봉투 배부('25년 상가 중심(30L 이상)→'26년 가정 확산(20L 이하))
 - (산업연계) 공공선별시설-열분해사 연계, 선별량의 약 30%(1,500톤/월) 화학적 재활용
- (폐현수막) **'26년 지방선거 기간 발생 폐현수막 100% 고품질 재활용**
 - 선거 폐현수막 전량 市 공용집하장(전국 최초 개설, '25.5.) 활용 집중 처리
 - 국내 화학사 협업,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자원화(PET 펠릿)
- (커피박·종이팩) **쉼 카페 참여 기반('25년), 커피박종이팩 통합 수거체계 구축**
 - (커피박) 재활용 수거업체로 회수체계 일원화(격일), 전용봉투 보급
 - (종이팩) 민관협력, 공동주택 내 전용수거함 설치 등 수거시스템 구축
- (봉제원단) **보조금 지원 및 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**
 - 봉제원단 전용봉투·마대 보급 분리배출 강화(강북·성북 등 327백만원)
 - 소량발생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자치구(강남 등)의 봉제원단 집하장 공동이용 확대

1-6

음식폐기물 원천감량 및 시민 실천확산

생활환경과장: 박상준☎2133-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: 이금재☎3736 담당: 김순곤,고유미☎3737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 원천감량 강화를 위한 종·감량기 보급, 시설 확충 및 시민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 유도

□ 사업개요

- 음식폐기물 원천감량 위한 종·감량기 보급 및 시민 실천문화 확산
 - ('14년) 3,181톤/일 → ('24년) 2,368톤/일 → ('26년) 2,288톤/일(연간 40톤/일 감량목표)
- 음식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(음식물, 음폐수) 확충
- 사업예산 : 3,788백만원(종·감량기 보급 등 1,776, 처리시설 개선 2,012)

□ 추진계획

- 주택·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원천 감량 위한 종·감량기 보급
 - (가 정) 공동·단독주택 등 RFID 종량기 2,000대(누계 29,754대)
 - (사업장)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 집단급식소, 대형음식점 등 대형감량기 29대(누계 524대)
 - ※ 다량배출 사업장 등 RFID 종량기 신규 보급 추진(50대)
-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다각화
 - (가 정)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, 잔반제로 챌린지, 분리배출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
 - (사업장) 감량·적정관리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(40개소), 지도점검 실시(연 2회)
- 음식물류 폐기물 노후 시설 및 음폐수 하수연계 처리시설 개선

구 분	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	서남 음폐수처리시설
사업기간	'24.1.~'26.12.	'21.5.~'27.5.
시설규모	(음식물) 100톤/일	(음폐수) 330톤/일
처리방법	사료화	바이오가스화
추진내용	음식폐기물 노후시설 개선	음폐수 하수연계 처리시설 개선

1-7

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운영 추진

자원회수시설과장: 이형규 ☎2133-9930 총괄팀장: 김정목 ☎9932 담당: 염서윤 ☎9934

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·관리 체계 강화로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 제고

□ 사업개요

-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(강남·노원)으로 공공소각 처리 역량 강화
- 광역자원회수시설(4개소)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
- 소요예산
 - (현 대 화) 약 16억원*(기술진단 6, 타당성조사·기본계획 용역 10) *'25년 이월 예산
 - (운영관리) 약 1,120억원(양천 178, 노원 252, 강남 352, 마포 338)
 - ※ '25년 기준 총 644천톤(양천 101, 노원 150, 강남 236, 마포 157) 생활폐기물 처리

□ 추진계획

- 강남·노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, 현대화 세부방안 마련
 -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·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*, 이해관계자(시·구의원, 주민·입지자치구 등)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설별 최적의 현대화 방안 도출
 - * (기술진단) 강남 2월, 노원 3월 완료 예정 (용역) 강남 7월, 노원 10월 완료 예정
 - 필요 시설용량, 소요 사업비, 추진 일정 및 사업 시행방식 등 세부계획 수립
 - ※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,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, 중앙투자심사 자료 등에 활용
- 자원회수시설별 대정비 기간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
 - 시설별 대정비 추진(양천·강남 4~7월, 노원·마포 10~11월, 시설별 평균 52일)
 - 전문가 합동점검 확대('25년 1회→'26년 2회) 및 스마트 AI 안전관리 시스템* 전 시설 확대 도입('25년 1개소→'26년 4개소)으로 사고예방 강화
 - * 주요작업에 대해 AI 지능형 영상관제 등을 통한 각종 사고징후 등 실시간 감지

2.

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

2-1 건물에너지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

2-2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

2-3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실천 강화

2-4 시민참여형 녹색실천 플랫폼으로 에코마일리지 전환

2-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산업 지원

2-6 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

2-7 환경영향평가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

2025년 사업평가

□ 그간의 성과

-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설정 및 5개년 실행계획 수립·시행

2050 탄소중립 비전 설정

5개년 실행계획 수립·시행

2033년까지 온실가스 50% 감축



건물·교통 등 6개 부문 76개 사업

-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확대 시행, 전기차 보급 및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조성

건물

-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6,392개소 시범사업 참여
-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3,000개소 운영

수송

- 전기차 12만3천 대 보급, 충전기 8만1천 기(32만대 충전가능) 구축
 - 전기차 캐즘* 극복하고 '25년 수요 회복세(전년대비 41% 증가) 본격화
- *캐즘(chasm) : 신기술이 일반수요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- 민간 건물의 자발적 참여 한계로 인한 제도 정교화 및 시행기반 강화 필요
 - 신고·등급 시스템 데이터 매칭·오류 검증 강화 및 편의성 개선 필요
 - 건물을 대표 유형으로 분류한 방식은 건물별 온실가스 총량 설정에 한계

☞ 데이터 검증 시스템 개선, 건물특성을 반영하여 배출기준(12→60개) 세분화

- 상용(택시·화물) 전기차 구매비용 및 충전불편 등으로 상대적으로 보급 저조
 - 택시는 LPG차 재출시로 가격 경쟁력 약화, 화물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수요부진

☞ 성능개선 차량 및 차종별 맞춤형 추가 보조금 지원 확대

정책방향 및 성과 목표

□ 정책방향

- 건물 온실가스 실배출량 관리제도 고도화 및 시행기반 강화
- 친환경차량 지속적 확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
- 시민·기업·자치구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

□ 추진전략

건물
온실가스

- ▶ (신고·등급제)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 기반 강화
- ▶ (총량제) 서울형 모의 탄소시장 확대 추진

친환경차량
보급

- ▶ (전기차) 대중교통 등 상용차 중심 전기차 보급 지속 확대
- ▶ (충전인프라) 품질향상 및 충전시설 안전·관리 강화

시민참여

- ▶ (시민) 폐기물 등 생활 속 감량 및 친환경 실천 확산
- ▶ (네트워크) 국내(기업·단체·자치구)·해외 탄소중립 협력 강화

□ 사업목표

사업별	2025 (실적)	2026	2027
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	6,392개소	7,700개소	9,000개소
건물 온실가스 총량제(누계)	3,000개소	3,500개소	5,000개소
친환경차량 보급(누계)	127천대	149천대	183천대

2-1

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

친환경건물과장: 정지욱☎2133-3590 친환경건물정책팀장: 안승현☎3592 담당: 정미선,이현주☎3706

기축건물 온실가스에 대한 실 배출량 관리와 제도 정교화를 통해 감축 이행력 제고 및 시행기반 강화 추진

□ 사업개요

- (대 상) (공공) 연면적 1천㎡ 이상 (민간) 3천㎡ 이상, 1만 5천 개 건물
- (내 용) (신고·등급) 에너지 사용량 신고·등급 부여, (총량)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
- (목 표) (신고·등급) 7,700개소(공공 3,550, 민간 4,150), (총량) 3,500개소(공공 1,414, 민간 2,086)

구 분	대 상	'24년(실적)	'25년(실적)	'26년(목표)
신고·등급	15,125 개소 (공공 4,746)	4,281 (28%)	6,392 (42%)	7,700 (50%)
총 량 제	(민간 10,379)	2,000	3,000	3,500

- (사업예산) 755백만원(신고·등급제 246, 총량제 509)

□ 추진계획

①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참여율 확대('25년 42% → '26년 50%)

- (시스템 개선) 신고·등급 시스템 **데이터 검증 강화** 및 편의성 개선(1월)
 - 데이터 매칭·오류 검증 강화, 연차별 증감 분석, 차년도 자동연동으로 편의성 제고
- (자발적 참여) 교육청, 종교계 등 분야별 **맞춤형 설명회** 개최(3~6월)
 - 학교·종교계의 신고·등급제 참여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협업 강화
- (자치구 협업) 자치구 선도지역 **운영 지원**(총 100백만원)
 - 신고·등급제 참여를 위한 시민·건물 대상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추진

- (인센티브) 참여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컨설팅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(9월)
 - (A~B등급) 저탄소건물 선정 홍보, (C~E등급, 총량제 건물) 감축 컨설팅 제공
 -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(BRP) 융자금 우선지원(건물 분야 50억원)

② 건물 에너지 실배출량 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제도개선(연중)

- (기반강화) 표준배출기준 12개→60개 세분화, 감축목표 재설정·실증
 - 변경된 표준배출기준 적용하여 건물 유형별 감축목표 재설정
 - ※ 에너지 사용패턴의 다양성(병원 내 의료장비, 숙박시설 내 수영장 유무 등) 반영
 -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목표 및 표준배출 기준 검증
- (제도개선)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의무화 근거 마련 위한 중앙부처 지속 협의
 - 에너지사용량 신고 의무화 및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지자체 이양 추진
 - ▶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(안)」 국회 계류 중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)
 - 개별건축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
 - ▶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(안)」 국회 계류 중(국토교통위원회)
 - 법 개정 후 필요시 시 에너지조례 등 준비를 통해 세부 시행근거 마련

③ 총량제 대상 건물 모의탄소시장 확대 운영(시 소유 → 시·구 소유 건물, '26.9.~)

- 시 소유(538개) → 시·구 소유 건물(1,612개) 모의거래 대상 확대
 - 배출허용량* 대비 건물별 온실가스 부족량/잉여량 거래
 - * 건물 용도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% 감축량으로 설정
 - '25년 43개 실·국 참여(92%), 348건 매도·매수(25,089tCO₂)
- 건물 보유기관 간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시행
 - (1차) 시·자치구 기관별 관내 건물 간 거래('25.9.~10.) → (2차) 시·자치구 간 거래('26.9.~10.)
 - 모의거래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('26.11.~12.)

2-2

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

친환경차량과장: 이소연☎2133-3580 팀장: 송학용☎3582/ 박종천☎3640/ 문상만☎3606/ 김인준☎9770

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운송 체계로의 전환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전기차·수소차 보급 확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

(단위 : 대)

구 분		2025년 실적	2026년 목표	누 적
전기차	계	19,081	22,526	145,521
	승용 / 택시	12,280 / 1,428	15,094 / 1,200	101,889
	승합 / 화물	336 / 1,249	206 / 1,779	16,024
	이륜	3,788	4,247	27,608
수소차	계 (승용 / 버스)	271 (244 / 27)	327 (290 / 37)	3,931

- 사업예산 : 1,876억원(전기차 보급·충전인프라 1,594, 수소차 보급·충전인프라 282)

□ 추진계획

① 차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기차 전환 가속 추진

- (승용) 시민수요 반영 **보급물량 확대 및 전환 부담 완화**로 대중화 견인
 - (물량) 15,094대(전년 대비 22.9%↑), (지원) 내연차 폐차매매시 전환지원금(최대 130만원)
- (상용) 운행량 많은 **대중교통·택배차량 전환** 지속 추진
 - (택시·화물) 제조사 할인(50만원) 시, 市 보조금 추가 지원(50만원, 택배 100만원)
 - (버스) 시비 추가지원(30백만원)을 통한 구매비용 완화로 전기버스 도입 확대
- (이륜) 생활소음 등 시민일상과 밀접한 **상업용 전기 이륜차 지원 강화**
 - (지원) 배달용·소상공인(최대 46만원), 배터리 교환형(최대 24만원) 추가 지원
 - (충전기) 짧은 주행거리 한계 극복을 위해 국가표준 배터리교환(BSS) 인프라 확충(150기)

2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략적 확충 및 관리 강화

○ '26년 7,034기 신규 설치하여 안정적 충전 서비스 제공

- 역세권·공영주차장 등 급속(280기), 화재예방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(975기)

구 분	2025년 실적(누적)	2026년 목표	누 적
충전기(충전가능대수)	81,266기(32만대) →	7,034기*(8만대)	88,300기(40만대)

* 市 재정·민간보조사업 1,346기, 기후부·한전 설치 사업 5,688기 활용

○ 청소차·마을버스·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확충

- 전기청소차 차고지(4기), 마을버스 충전기 추가 지원(1천만원/기)
- 조작부 높이 낮춤, 수어 영상 지원 등 교통약자 충전환경 개선 동행충전기 설치(100기)



< 천장형 충전기(중량차고지 실증 ~'26.6월) >



< 동행 충전기 >

○ 전기차 충전시설 체계적 관리 및 안전 강화

- CCTV 영상 활용 AI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신속 대응
- 충전시설 신고제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

3 수소충전 인프라 연계 수소차 점진적 확대 보급

○ 수요 증가에 맞춰 수소차 보급 확대(승용 290, 버스 37)

- (승용) 신모델 출시('25.6.)에 따른 수요 증가 반영('25년 244대 → '26년 290대)
- (버스) 버스 제조사와 운수업체간 협의에 따른 전세·공항버스 보급 확대

○ 공영차고지 버스 충전소 확충 및 민간 수소 충전소 구축

- (공공) 시내버스 충전 송파공영 차고지 수소충전소(100대/일) 착공('26.11.)
- (민간) 마곡 에코(3월 준공), 양천·진관2·은평(2월 사업자 공모), 강서 오쇠(區 협의)

2-3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실천 강화

기후환경정책과장: 노수임 ☎2133-3510 팀장: 김성관 ☎3523/ 전종일 ☎3528/ 김경란 ☎3660

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정책 이행기반 강화와 시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

□ 사업개요

- 탄소중립을 위한 市·시민 주도 실천문화 확산 및 국제교류 강화
 - (기후대응) 기후정책 수립, 점검 및 환류, 기후예산제 강화 등
 - (시민실천)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, 지구의 날 개최, 시민참여 생활폐기물 감량
 - (국제협력) C40, ICLEI 국제 교류,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 참여
- 사업예산 : 총 2,669백만원(기후대응 1,193, 국제협력 698, 시민실천 778)

□ 추진계획

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이행기반 강화

- 기후행동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기후정책 체계화
 -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적응 등을 포함한 「제2차 2050 기후행동계획」 수립
 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「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('27년~'31년)」 수립
- 탄소중립 정책 체계적 이행관리 및 시민참여·거버넌스 통한 평가 강화
 -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이행점검 관리(연 2회)
 - 시민평가단(녹색시민위+시민) 구성·운영(7월, 40명), 탄소중립 정책 점검 및 평가(~12월)
- 기후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·구 동행 포럼 정례화 등 협력 기반 강화
 - 기후결산서 감축효과 분석 공유(예산담당관) 등으로 기후예산제 환류 체계 마련
 - 정책지원·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시·구 탄소중립 동행포럼 정례 개최(분기 1회)

③ 폐기물 감축 등을 통한 시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

- **환경 거버넌스 운영**을 통한 시 환경정책 고도화 및 시민 참여 확대
 -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정책 자문(36건) 및 심의(3건), 의견수렴 포럼(7회 등) 운영
 - 민간 주도의 폐기물 감축, 생태·환경교육 등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(3월~)
- **시민 참여 환경 행사 개최 및 청년·시민 주도 폐기물 감량 실천 확산**
 - 환경기념일 연계한 “지구의 날(4.22.) 행사” 개최(광화문광장, 4.18.(토))
 - 청년 중심 캠퍼스·지역 생활권 기반 폐기물 감량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
 - 시민참여 폐기물 다이어트 추진, 100일간 배출량 자가 진단 및 감량 실천



지구의 날



녹색서울시민위원회 종량제 포럼



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 도전

② 국제기구·해외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리더십 강화

- **C40 등 국제기구 활동 및 해외도시 교류**를 통한 시 기후리더십 강화
 - C40 운영위원회(3회), ICLEI 지역집행위(1회), C40 대기질 컨퍼런스(3월, 방콕) 등 참여
 - 국제포럼 참여(9월, 베이징), 정책 교류(중국, 싱가포르 등 도시)로 정책 확산·협력 강화
 - 「제2차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」 C40 승인 추진('26.12. 限)
- **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 참여** 통한 시 정책 투명성 및 국제 신뢰도 강화
 - CDP에 시 기후위기 대응 목표,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(7월),
 - CDP 평가 5년 연속 “A등급” 달성 추진



2-4 시민참여형 녹색실천 플랫폼으로 에코마일리지 전환

기후환경정책과장: 노수임 ☎2133-3510 환경마일리지팀장: 정민호 ☎3601 담당: 유성원 ☎3585

에코마일리지를 시민 참여형 녹색실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시민 지원 강화

□ 사업개요

- (근 거)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
- (목 적)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시민 지원
- (내 용) 에너지 사용감축·녹색실천 활동 참여자 마일리지 지급

구 분	녹색실천('26년~)	건물('09년~)	승용차('17년~)
참여대상	서울시민 (만 14세 이상)	서울 소재 개인/단체(10TOE이하)	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·승합
활동내용	일상 속 실천항목 참여	전기·수도·가스 절약	주행거리 감축
마일리지	100~5,000/회, 상시	10,000~50,000/6개월	10,000~50,000/년

- (사업예산) 9,907백만원(운영·관리 1,511, 인센티브 8,396)

□ 추진계획

① (녹색실천)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 지원 신규추진

- 서울시 환경 현안과 직결되는 **일상 속 실천 프로그램 운영**

(1 분 기)	(2 분 기)	(3 분 기)	(4 분 기)
자 원 순 환	에 너 지	오 존	미 세 먼 지
직매립 금지 대응	건물에너지 절감	오존 저감·대응	미세먼지 저감·대응
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등	지구의날 행사 참여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방문	대기환경정보 알림신청 오존 저감형 제품 사용	녹색실천 운전 계절관리제 참여

※ 환경인식 제고 퀴즈(주간), 기후환경 교육 등 연중 상시 운영

- 홈페이지 개선, 유연한 실천항목 운영 기반 확보 등 **시민 편의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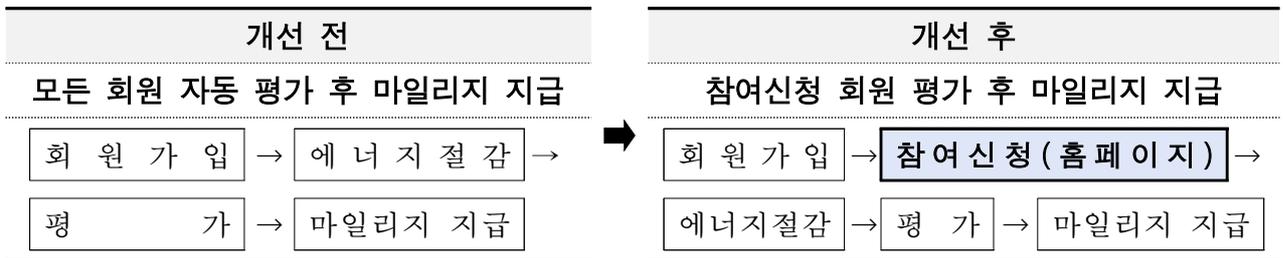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 화면 최적화, 참여형 요소 추가 등 포함 시스템 개선 예정(하반기)

○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녹색실천 마일리지 운영

사업명	추진내용	추진일정	인센티브
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	시민·인플루언서 등 동참 시민참여 분리배출 문화 확산	2.9. ~ 4.30.	500M
쓰레기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	시민모임 등 354명 공개모집 100일간 생활폐기물 감량	2.9. ~ 6.10.	1,000M~5,000M
생활폐기물 감량실천 도전 릴레이	명절 및 환경 기념일 등 폐기물 감량활동 시민실천	2월 ~ 9월	1,000M
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	市 관내 아파트 단지 공개모집 재활용 증량을 통한 종량제 감량	2월 ~ 10월	총 1천만M

② (건물) 참여 인식 강화를 통한 능동적 에너지 절약 실천 촉진

- (개인회원) 참여신청(1회/6개월) 의무화로 전략적 에너지 사용 관리 유도
 - 에너지 사용분석(과거, 다른 회원 대비)을 통한 본인 패턴 확인으로 탄소 감량 유도



※ 65세 이상 노년층, 디지털 약자 등은 '26년 유예 후 '27년부터 적용 검토

- (단체회원) 서울특별시환경상 수여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인
 - 대형 단체(연간 에너지 사용량 10TOE 이상)는 단체의 평판을 높이는 보상 선호 반영
 - ※ 소상공인(10TOE 미만)은 현행 평가기준 유지(하동절기 평가, 각 5만 마일리지 보상)

③ (승용차) 합리적·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개선

- 온실가스 배출량 대응 합리적 수준으로 마일리지 하향 조정(최대 7만→5만)
 - ※ 온실가스 배출비중/마일리지 : (건물) 67.9%, 최대 10만/년 / (수송) 17.6%, 최대 7만/년
- 탄소중립포인트(승용차)와 유사한 승용차 마일리지 기후부와 통합 준비
 - 제도 간 차이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시민불편 해소 필요
 - 시민불편 및 기관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후부 평가방법 적용 '26년 시범운영
 - 참여기간(매년 2월), 평가방법(누적vs최근(7~8개월) 주행거리 비교·평가)

2-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산업 지원

기후환경정책과장: 노수임 ☎2133-3510 기후환경산업팀장: 전종일 ☎3528 담당: 김경희 ☎3586

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및 실증,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

□ 사업개요

-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·성장을 위한 펀드 투자 및 실증, 맞춤형 지원
- 기후테크 전시·컨퍼런스를 통한 기술 홍보 및 인식 확산 활동 전개
- 사업예산 : 3,281백만원
 - 기후테크센터 830, 녹색기업창업·기후테크펀드 1,157, 실증사업 1,000, 컨퍼런스 294

□ 추진계획

- (투자) 유망 기후테크 기술 보유기업 육성을 위한 **펀드 조성·운영**
 - 서울소재 기후테크 초기기업 중점 지원·육성 및 시 주도 펀드 운용 본격화
 - 기후테크 펀드 2호 결성(7월중, 20억원 이상) 통한 초기기업 집중 발굴 및 투자 확대
- (지원)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통한 **기업 맞춤형 지원**
 - 기후테크 기업 맞춤형 교육·멘토링·컨설팅(3월~), 기후테크 창업경연대회(6월)
 - 국가 R&D 사업 지원, 시제품 제작, 기후테크 기업 실태조사(5~7월)
 - 온라인 기획전, IR컨설팅·투자상담회, 기업가치 평가 지원 등(8~11월)
- (실증) 기후변화대응 **혁신기술 실증사업** 및 후속 연계 지원
 - 시·구·민간 정책 수요 반영 과제 발굴 및 기관 발굴 사업설명회 개최(2~3월)
 - 실증기업 모집공고(3월) 및 실증기관 매칭 기술 및 사업 실증 추진(5월~)
 - 기후테크센터 연계(기업 맞춤형 컨설팅, 신용평가 등) 기업의 성장지원 지속 추진
- (홍보) 스타트업 기술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**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**
 - 일시/장소 : '26.6.25.(목) ~ 6.26.(금) / DDP 아트홀 2관
 - 주요내용 : 체험형 기술 전시, 최신 트렌드 공유 컨퍼런스, 투자 1:1 밋업 등

2-6

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

기후환경정책과장: 노수임☎2133-3510 기후환경교육팀장: 장수천☎3620 담당: 오화민,임서지☎3538

시민 대상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체계적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 강화
- 체험·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
- 사업예산 : 5,915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(환경교육) **체험·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**(’26.1.~)
 - 맞춤형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(유아, 초·중등), 서울형 이동환경교실 운영
- (역량강화) 사회환경교육 담당자, 교원 대상 **환경교육 역량 강화**
 - 기초·사회환경교육기관 담당자, 유아/초·중등 교사 연수, 서울형 보수교육 등
- (기관협력) 환경교육주간 **행사**(6월) 및 **광역·지역 정기 협의회**(4월/10월)·**포럼** 개최
 - 환경교육관련 행사부스 운영, 광역-기초 및 광역-사회교육기관 간담회 등
- (기반조성) **‘에코스쿨’ 조성**(’26.12월)·**운영**(’27.3월) 및 **탄소중립체험관 재개관**
 - * 대상지 : 공진중학교 폐교부지(강서구 가양동)/ 연면적 : 6,783㎡
 - (에코스쿨) 市-교육청-기후부 협력 사업 및 시민 대상 환경 체험전사교육 공간으로 활용
 - (탄소중립체험관) AR체험·참여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(헤치 활용) 기반 환경교육 등



서울 환경교육주간 행사부스



광역센터기초환경교육센터 협의회



탄소중립체험관 전시(안)

2-7

환경영향평가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

친환경건설과장: 정지욱 ☎2133-3590 환경영향평가팀장: 최미경 ☎3543 담당: 김정학 ☎3546

개발사업 시행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등 시정목표 달성

□ 사업개요

○ 환경영향평가제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개선방안 연구

< ※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>

- ▶ (대상)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종 개발사업*
*정비사업(부지면적 9만~30만㎡), 건축물(연면적 10만㎡ 이상)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
- ▶ (내용) 사업 인·허가 전 환경영향을 예측·평가* 하여 저감방안 마련
*대기·토지환경 등 6개 분야, 온실가스·토지이용 등 20개 항목

□ 추진계획

① 불필요한 중복규제 추가 발굴 및 철폐 추진(~'26.8., 고시개정)

- 타 심의와 **중복항목**(일조장해·경관) **이관**(→건축기획과)하여 **평가항목 간소화**
- 이관 협의된 항목은 건축경관 심의기준 등재 후 삭제 추진

항 목	환경영향평가 시 검토내용	타 심의 검토내용
일조장해	외·내부 일조 분석	(건축심의) 동 간 간격 검토
위락경관	가로녹시율 분석 및 녹시율 25% 이상 확보	(경관심의) 통경축, 스카이라인 확보

② 환경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('26.2.~10., 서울연구원 연구과제)

- 23년간('02년~'25년) 운영된 市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**정량적 성과 분석** 및 현시점에 맞는 **제도 개선방안 도출**

- 전문가·평가 대행업체·유관단체 등 의견 수시 반영

※ 기존 연구사례 :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(서울 研, '10년)

3.

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

3-1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

3-2 지열·수열 등 재생열 보급 활성화

3-3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태양광 확대

3-4 에너지 공급·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

2025년 사업평가

□ 그간의 성과

-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자립률 제고 위해 **지속적 신재생에너지 보급**
 - 지열·수열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'25년 누적 1,610MW 보급

보급실적(MW)	지열·수열	태양광	기 타*
1,610	513	482	615

* 기타 : 연료전지, 태양열, 폐기물, 바이오, 소수력 등

- **신재생 의무비율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분야 설치 견인**

녹색건축물 설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신재생 의무비율 연차별 확대('26년 최대 15.5%)• 비주거(3만㎡↑)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의무화(50%)
제로에너지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비주거(1천㎡↑) 신축건물 ZEB 5등급 의무('26년~)

- **서남2단계 추진 방식 결정**으로 분산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
 -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추진 방식 SPC로 결정('25.9.)
 - SPC 출자시행 동의안 시의회 의결('25.12.)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- (지열·수열) 초기투자 부담, 공기지연, 전문성 부족 등으로 보급 제한적
 - ☞ **재정지원·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로 재생열 확대**
- (태양광) 양적 확대 위주 성장의 한계,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급 필요

☞ **신기술디자인 태양광 지원 및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**

정책방향 및 성과 목표

□ 정책방향

- 노후 열시설 개선·현대화를 통해 중단없는 열에너지 공급
- 도심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
-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위한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구축

□ 추진전략

안정적 열공급

- ▶ 시설 현대화 및 노후 열원 시설 개·보수 추진
- ▶ 서남집단에너지시설(2단계) 및 배관망 개선 등 추진

신재생 에너지

- ▶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을 통한 민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
- ▶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

에너지 안전관리

- ▶ 에너지원별 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
- ▶ 에너지 위기상황 대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

□ 사업목표

에너지원	2025(MW) (실적/누계)	2026년(MW)	2027년(MW)
계	1,610	152	226
지열·수열	513	103	135
태양광	482	39	65
기타	615	10	26

3-1

안정적인 열공급 추진

녹색에너지과장: 정순규 ☎2133-3550 에너지시설팀: 동세원 ☎4391 담당: 박필관 ☎3554

노후 열원시설의 개선·현대화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(2단계) 건설 및 열수송관 환상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열원시설 신축, 노후설비 개선 등을 통해 '중단없는 열공급' 체계 구축
- 사업예산 : 10,018백만원(시설 현대화 738, 시설물 보강 9,280)

□ 추진계획

- (서남권 열공급) 서남 집단에너지시설(2단계) 건설 추진
 - (시설규모) 열병합발전시설 1기(285MW, 190Gcal/h), 열전용보일러 1기(68Gcal/h)
 - (향후일정) SPC설립('26.상)→착공('26.하)→PLB 등 준공('27.하)→전체 준공('31.하)
- (시설 현대화) 목동·양천시설 현대화 최적방안 다각적 검토
 - (사업대상) 목동플랜트(전력 24MW, 열 524Gcal/h) 및 양천자원회수시설(400톤/일)
 - (사업내용) 시설 통합·연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, 시설 고도화 추진
 - (추진계획) 열·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실시('26.2.~'27.2.)
- (열수송관 안전) 중단없는 열공급을 위한 서남권 환상망 구축 추진
 - (추진내용) 단선 구조의 서남권 열수송망을 배관 연계방식으로 개선,
보수사고시에도 우회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강화
 - (추진계획) 기본계획 검토 및 타당성조사·투자심사 이행('26.1.~12.)
- (시설물 보강) 노후 열원시설 개선을 통한 설비 신뢰성 확보
 - (목동 플랜트) 열원시설·가압장 내 노후 배전반 등 전기제어설비 교체
 - (노원 플랜트) 터빈 블레이드, 급수펌프(3대) 등 주요 기계설비 교체

3-2

지열·수열 등 재생열 보급 활성화

녹색에너지과장: 정순규 ☎2133-3550 열에너지사업팀장: 김성국 ☎3573/ 신재생에너지팀장: 차재현 ☎3558

서울 도심 여건에 적합한 지열·수열 등 재생열 보급 확대와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의 열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

□ 사업개요

- (목 표) '30년까지 지열·수열 1.3GW 보급(지열 1GW, 수열 0.3GW)
 - ※ '26년 목표 : 103MW 보급 (지열 68MW, 수열 35MW)
- (현 황) 누적 513MW 보급('25.12월)
- (사업예산) 3,328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(신 축) **재생열 의무화·공사 보조금 지원**으로 보급 활성화
 - 연면적 3만㎡ 이상 대규모 비주거 건물 대상 재생열 도입 의무화('25년~)
 - 지열 천공비, 수열 관로공사비 등 보조금 지원(kW당 20~30만원, 최대 2.5억원)
- (기 축) **공공·민간 노후 지열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효율개선**
 - (공 공)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등 노후 지열설비 교체비 지원 추진
 - (민 간) 민간 노후 지열설비 교체 및 정비비용 70% 지원
- (컨설팅) **전문가 현장 컨설팅**으로 설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 강화
 -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중·설치 예정 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('25년 56건)
- (모니터링) **지열·연료전지 모니터링시스템(REMS) 구축**
 - 지열 및 연료전지 가동데이터 수집·저장·관리 시스템 구축(~'26.10.)
 - 市 소유·관리 시설, 보조금 지원 시설 등 市 예산 투입 설비 관리 고도화

3-3

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태양광 확대

녹색에너지과장: 정순규 ☎2133-3550 신재생에너지팀장: 차재현 ☎3558 담당: 김민아 ☎3567

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자인·신기술 중심 태양광 보급 및 관리 강화로 서울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달성 추진

□ 사업개요

- (목 표) '30년까지 태양광 871MW 보급
 - ※ '26년 목표 : 39MW 보급
- (현 황) 누적 482MW 보급('25.12월)
- (사업예산) 2,495백만원 (공공 2,000, 민간 495)

□ 추진계획

- (공공) **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** 이행 사전준비 및 **유휴부지 활용** 보급
 - 1,000㎡ 이상 공공주차장(148개소, 42.3MW)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행 준비
 - ▶ 합리적 면제 기준 마련으로 기후부 협의를 통해 의무화 대상 주차장 확정('26.4월)
 - 푼도아리수정수센터(92kW), 우이신설선 역사(53kW) 등 공공부지 설치 지원
- (민간) **건물일체형 보조금** 지원, 건물 **신재생 의무비율** 등 민간 참여 확대
 - 도시 특성에 맞는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설치 보조금 지원
 -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신재생 의무비율 연차별 강화로 민간 주도 보급 확대
 - ▶ 신재생 의무비율 '22~'27년 연차별 0.5%p 단계적 상향('26년 10.5~15.5%)
- (관리 고도화)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**태양광 관리 강화**
 - (햇빛지도) 3D맵 고도화로 옥상 외 건물 입면 BIPV 발전량 시각화 및 정보 제공
 - (모니터링) 공공 태양광(1,372개소) 모니터링으로 운전 현황 및 점검 내역 관리

3-4

에너지 공급·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

녹색에너지과장: 정순규☎2133-3550 팀장: 동세원☎4391/ 차재현☎3558 /김금호☎3565 /이승구☎3710

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재난 상황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시설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

□ 사업개요

- 에너지 공급·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
 - 전기·열·가스 등 에너지원별 안전강화를 통한 차질없는 에너지 공급 추진
- 사업예산 : 10,373백만원(열공급 9,280, 전력 175, 태양광 918)

□ 추진계획

- (열공급)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**시설 안전관리 강화**
 - 24시간 열화상카메라 점검 및 누수감지센서 설치 확대로 열수송관 감시 강화
 - 노후 열수송관 정비(7.1km) 및 목동 공동구 전 구간(9.88km) 광섬유센서 설치
- (전 력)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한 **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추진**
 -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으로 정전사고 예방(50개소)
 - 전기안전관리자 정전 예방 및 대응 등 전문기관 연계 교육 실시(연 7회)
- (가 스)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**시설 안전점검·재난 대응체계 운영**
 - 도시가스회사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진행(연 2회)
 - 도시가스 공급위기 발생 신속 대응 위한 대응 체계 운영(상시)
- (태양광) **공공 규모별 정기점검 및 민간 노후설비 특별점검 시행**
 - (공공) 20kW 이하 설비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 및 관리자 교육 실시
 - (민간) 정기(1회/연)·특별(노후설비) 점검을 통한 미니 태양광 지속 사후관리

4.

대기질 개선으로 건강한 서울

4-1 4·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체감형 지원 확대

4-2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차량 저공해 전환 가속화

4-3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등 무공해 공사장 조성

4-4 생활권 초미세먼지 대책 집중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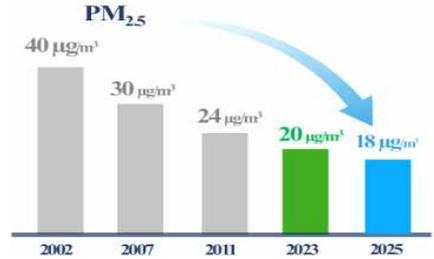
4-5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

2025년 사업평가

○ '25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$18\mu\text{g}/\text{m}^3$ 로

안정적 개선세 유지

- 좋음일수($15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) : '02년 49일 → '25년 182일
- 나쁨일수($35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) : '02년 179일 → '25년 32일



○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및 **운영 제한 제도적 기반 확립**

- 4·5등급 노후 차량 8,224대 대상 조기폐차·DPF 부착 등 저공해화 지원
- 「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'25.9.)

○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**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 수립**('25.4.)

-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저감을 위한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 추진
-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 재조정(5개 권역→단일권역), 대시민 홍보 및 전파 확대(5~8월)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○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 부문(28%)의 근본적 저감 대책 시급

- 특히 배출 비중이 큰 4·5등급 경유차(19.2%) 대상 탈(脫) 경유 전환 가속화 필요

☞ **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경유차 저공해화 집중 추진**

○ 생활권 내 배출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저감 사업 내실화 필요

- 생활 주변 배출원의 위해성 고려, 도심 내 분산된 생활권 배출원 집중관리 요구

☞ **공사장·사업장 등 생활 주변 오염원 대상 빈틈없는 대응·관리 체계 구축**

○ 기후변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증가에 따른 오존 농도 상승 대응 필요

- 최근 5년간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(32%↑)함에 따라 시민 건강 위해성 증대

☞ **고농도 시기(5~8월) 특별대책 수립 및 VOCs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강화**

정책방향 및 성과 목표

□ 정책방향

- ‘탈(脫) 경유화’ 본격 추진으로 더 맑은 서울 조성
- 생활 밀착 배출원(마을버스, 보일러, 도로 등) 저공해화 집중
- 배출원별 관리·고농도 시기 중점 이행으로 오존 관리 강화

□ 추진전략

조기 폐차 확대 지원

- ▶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탈(脫) 경유 가속화
- ▶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큰(22%) 건설기계 집중관리

생활권 배출 관리

- ▶ 마을버스 등 생활 주변 공공서비스 차량 저공해화 추진
- ▶ 가정·사업장 냉·난방설비 교체 및 도로·공사장 관리 강화

오존 관리 대책 강화

- ▶ 세탁소·생활소비재 등 생활권 오염원 저(低) VOCs 전환 유도
- ▶ 고농도 시기 오존 특별대책 추진 및 시민 맞춤형 대응 교육·홍보 강화

□ 사업목표

사업별	2025 (실적)	2026	2030
4등급 경유차 잔여 대수	61,716대	48,716대	- (조기폐차 완료)
경유 마을버스·청소차 잔여 대수	512대	469대	- (전환 완료)
민간 가스열펌프(GHP) 저감장치 부착	8,076대 (누계)	636대 (부착 종료)	-

4-1

4.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체감형 지원 확대

대기정책과장: 이홍석 ☎2133-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: 이용호 ☎4415 담당: 최상훈 ☎3651

4.5등급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의 시민 점점 홍보 강화를 통해
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 참여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

□ 사업개요

- (4등급 경유차) '26년 13,000대 조기폐차, '30년까지 전량 조기폐차 완료
- (5등급 자동차) 조기폐차, DPF 부착 '26년까지만 지원 후 사업종료
- 사업예산 : 33,77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(4.5등급차) **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** 중점 추진

4등급 경유차

(조기폐차) 13,000대

5등급 자동차

(조기폐차) 620대 + (저감장치) 8대

-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(13,000대)
 - ※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추가지원(500대, 1백만원/대) 포함
- 5등급 자동차 저공해화(628대) : 조기폐차 620대, 경유차 DPF 부착 8대
 - ※ 5등급 조기폐차, DPF 부착은 '26년까지만 지원 예정(⇒ 조기폐차 위주로 마무리 지원)
- (홍보강화) 공급자에서 **수요자 중심으로** 조기폐차 지원사업 **전방위 홍보**
 - 교통복지채널, 자동차 검사소, 농수산물시장 등 수요자 점점 공간 활용 정책 안내
 - 저소득층·소상공인 대상 자치구 복지관, 전통시장 상인회 등 연계 홍보
 - 녹색교통지역 찾아가는 조기폐차 설명회 운영을 통한 정책 참여 유도
 - ※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(종로·중구 일대 16.7km²) 지정('17.3.),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중

4-2

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차량 저공해 전환 가속화

대기정책과장: 이홍석 ☎2133-3630 대기정책팀장: 장지애 ☎3632 담당: 오경석 ☎3633

마을버스, 청소차 등 생활주변 공공자동차의 선제적 저공해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민간부문의 저공해 전환 유도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표) '30년까지 마을·광역버스, 도로청소차 100% 저공해화 달성
 - 경유 마을버스 344대,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1,000대, 도로청소차 168대 운영 중
- (사업내용)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전기 충전인프라 확충

□ 추진계획

- (마을버스) 시민의 발 '마을버스' 전기차 우선 전환

마을버스 1,626대 중 경유차 344대(21%)	전기차 전환 잔여 경유차 비율	⇒	('26년) 28대 19%	(~'30년) 344대 Zero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차량 노후도(차령 최대 11년)·수요 기반 연차별 저공해화 및 보조금 지급(1억 원 內)
- '26년 버스 전용 충전기 91기 설치, 전기버스 전환과 연계하여 지속 확충

- (광역버스) 서울시 진입 경기도 광역버스 저공해차 전환 추진

시계외 버스 5,862대 중 경기도 경유차 1,000대 (17%)	전기·수소·가스차 전환 잔여 경유차 비율	⇒	('26년) 200대 14%	(~'30년) 1,000대 Zero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(수도권청, 서울·인천·경기) 활용, 저공해버스 우선 도입 협의
- 서울진입 노선 협의시 친환경버스 운행 조건 부여로 저공해차 전환 유도

- (청소차) 골목길·도로변 경유청소차를 전기·CNG 등 저공해차로 교체

도로청소차(직영) 450대 중 경유차 168대(37%)	CNG·전기차 전환 잔여 경유차 비율	⇒	('26년) 15대 34%	(~'30년) 168대 Zero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구매보조금 : 전기차 400백만원, CNG차 300백만원
- 충전기 : (~'25년) 9개소, 28기 → ('26년) 4개소, 5기 추가 설치

4-3

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등 무공해 공사장 조성

대기정책과장 : 이홍석 ☎2133-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: 이용호 ☎4415 담당: 최상훈 ☎3651

초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노후 건설기계의 전동화 개조, 전기건설기계 보급 지원 등을 통해 무공해 공사장 조성 기반 마련

※ 건설기계(대수)는 자동차의 약 1%(3.9만 대)지만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20% 차지

□ 사업개요

-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, 전동화 개조 등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점검
- 전기건설기계 보급, 무공해건설현장 지원을 통한 무공해 전환 추진
- 사업예산 : 2,049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(건설기계 저공해화(66대)) 전동화 30대, 조기폐차 30대, 엔진교체 5대, DPF 1대
 - 시민수요에 맞춰 DPF부착, 엔진교체에서 **전동화, 조기폐차 중심으로 지원사업 전환**
 - ※ '24년 도입된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 확대: 1대('24년)→19대('25년)→30대('26년)
- (전기건설기계(21대)) 전기굴착기 11대, 전기지게차 10대 보급
 - **전기건설기계 보급 대상 확대** : ('25년) 전기굴착기 →('26년) 전기굴착기·지게차
 - ※ 전기굴착기 24대 보급('21년~): 3대('21년)→7대('23년)→6대('24년)→8대('25년)
- (무공해 건설현장(1개소)) 전기굴착기 등 **전기건설기계 사용경비 지원**
 - 市 발주 공사장 중 1개소 선정, 전기굴착기 등 사용 경비 지원
 - ※ 전기굴착기·지게차 및 이동형 충전시설(ESS) 임대료 등 부대비용 3억원 지원
- (공사장 점검(350개소)) 노후 건설기계 **사용제한 공사장 점검 강화**
 - (대상) 100억원 이상 관급 164개소, 환경영향평가 57개소, 자발적참여 129개소
 - (방법) 사용제한 이행 확인을 위한 기후부·시·구 합동 및 수시점검 시행

4-4

생활권 초미세먼지 대책 집중 추진

대기정책과장: 이홍석 ☎2133-3630 대기관리팀장: 오지연 ☎3324 에너지정책팀장: 이승구 ☎3710 도시청결팀장: 김창수 ☎3743

가정·사업장 난방설비 교체·개선 및 도로·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

□ 사업개요

- 가정·사업장 난방설비 교체·개선을 통한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
-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(64%) 및 공사장(26%)에 대한 관리 강화
- 사업예산 : 2,512백만원(GHP 저감장치 2,366, 비산먼지 146)

□ 추진계획

① [난 방] 가정·소규모 사업장 난방시설 개선 지원

-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**친환경 보일러**로 교체 (매년 20만대)

친환경 보일러 설치가능 250만대 중 152만대 교체 (60%)	친환경보일러	⇒	('26년) 170만대	(~'30년) 250만대
	교체 비율		68%	100%

- **가스열펌프(GHP) 배출가스 저감장치** 설치지원·관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
 - 민간 GHP(8,712대) 지원대상 중 8,076대 부착 완료(93%), 636대 부착 추진
 - GHP 노후화로 철거·교체 예정 사업장에 유관기관 GHP 교체 지원사업 연계·홍보

② [비산먼지] 도로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

- 서울 전역 도로 청소 및 **고농도 기간·지역 집중청소** ※ 집중관리도로 264km 별도지정

평 상 시	→	계절관리기간(12~3월)
간선도로 1회/일, 일반도로 1회/2일		집중관리도로 4회/일, 일반도로 1회/일

- 연면적 1만㎡ 이상 대형공사장(453개소) **서울형 친환경공사장** 운영 확대
 - 건설사 안내 등을 통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참여 확대 유도,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률 제고

4-5

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

대기정책과장: 이홍석 ☎2133-3630 대기정책팀장: 장지애 ☎3632 대기관리팀장: 오지연 ☎3624

오존 농도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출 저감 및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 마련

□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건강 위해성이 높은 오존(O₃) 농도의 증가로 시민 안전 위협
 - O₃ 농도(ppm) : '20년 0.025 → '23년 0.031 → '25년 0.033, 5년간 32% 증가
 - ※ 오존 농도 0.01ppm 증가 시, 65세 이상 사망률 1% 증가(국립환경과학원, '22년)
- (사업내용)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저감, 오존 예·경보제 운영, 노출저감 등

□ 추진계획

- (배출저감) 오존의 원인물질인 **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별 관리 강화**
 - (잉크·페인트) 低 VOCs 기준(함량인증 등) 설정 및 제품 DB 구축, 사용지침 마련
 - (소 비 재) VOCs 저감제품 정보제공 및 저감제품 사용 시민 에코마일리지 지급
 - (세 탁 소) 드라이클리닝 용제 90% 이상 회수 가능한 일체형세탁기 등 지원(42대)
- (계절관리) **고농도 시기(5~8월) 오존 특별대책 수립·추진**
 - 오존 예·경보제 운영 및 고농도 시 발령상황·행동요령 시민전파(서울톡, 전광판 등)
 - 주요 VOCs 배출사업장(세탁소, 도장시설 등) 지도·점검 및 관급공사장 低 VOCs 운영
 - 민간 자동차검사소 검사실태 조사(56개소), 자동차 배출가스·공회전 단속강화 등
- (역량강화) 오존에 대한 **시민교육 강화 및 수도권 공동 대응 역량 강화**
 - 市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용, 어린이·노약자·실외노동자 행동수칙 및 홍보물 제작·교육
 -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집중 특화관리 방안 연구 추진(서울연구원, ~'26.11.)
 - 기후부·인천·경기와 오존 대응 공동연구 진행 및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등 시행

5.

쾌적하고 깨끗한 서울

5-1 도시청결도 향상으로 깨끗한 도시 구현

5-2 도시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

5-3 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

2025년 사업평가

□ 그간의 성과

○ 가로쓰레기통 설치 확대 추진

- ('25년) 가로쓰레기통 884개, 담배꽂초 전용 수거함 276개 설치

※ 서울시 가로쓰레기통 설치현황 (단위: 개)



○ 시민참여 줍깅주간 운영

- 성수동 팝업스토어 거리 줍깅캠페인 실시(9월, 250여명 참여) 및 자치구 줍깅 주간 운영

○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확대 및 관리 강화

- 청소년 이용시설(도서관, 학원, PC방) 오염도 검사 확대('24년 17개소→'25년 153개소)
-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 점검 강화 및 부적합 세대 오염도 재검사 추진
※ 재검사를 통해 오염도 검사 초과율이 감소됨('24년 31.4% → '25년 30.1%)

○ 촘촘한 악취·소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- 음식점 악취 저감 지원(159대) 및 대형공사장(1만㎡ 이상) 소음 모니터링(62대)

○ 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

- 휴게실 시설 개선 155개소(22개 자치구),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(25개 자치구)

□ 한계 및 보완사항

○ 관광특구·상가밀집지역 내 일회용컵 등 무단투기로 도시청결도 저해

- 홍대 뒤덮은 일회용컵 쓰레기, 무단투기 몸살 '팝업 성지' 등 부정 보도

☞ 명동·홍대·성수동 등 도시청결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

○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값 차이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값 신뢰도 저하

☞ 역사별 보정계수 산출 및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보정 적용

※ 보정 적용시 자동측정기 PM-2.5 농도값 평균 약 22% 감소 예상

정책방향 및 성과 목표

□ 정책방향

-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-자치구 간 청소행정 협업 추진
-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실내공기질, 소음악취 관리 강화
- 환경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작업 안전 및 청소서비스 제고

□ 추진전략

청결도향상

- ▶ 시민편의 제고,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확대
- ▶ 유동인구 밀집지역 클린존 선정 및 집중 관리 시행
- ▶ 서울시와 함께하는 줍깅주간 운영으로 무단투기 인식 전환

생활공해관리

- ▶ 신축 공동주택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- ▶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운영으로 소음 저감 관리
- ▶ 비규제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지원,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

공무원근무환경

- ▶ 작업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
- ▶ 환경공무원 휴게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

□ 사업목표

사업별	2025 (실적)	2026	2027
가로쓰레기통 보급(누계)	7,085개	7,500개	효과분석 및 증설 검토
365청결기동대 운영	80명	100명	100명

5-1

도시청결도 향상으로 깨끗한 도시 구현

생활환경과장 : 박상준 ☎2133-3720 도시청결팀장 : 김창수 ☎3743 담당 : 조건희 ☎3733

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가로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청결도를 높이고, 시민 주도의 청소 문화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청결 도시 구축

□ 사업개요

- 가로쓰레기통 설치, 청결기동대 운영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-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상 속 청소 문화 확산 및 무단투기 예방
- 사업예산 : 2,899백만원(가로쓰레기통 262, 청결기동대 2,637)

□ 추진계획

- 거리 청결도 향상을 위한 **가로쓰레기통·담배꽂초 수거함 설치**
 - 버스정류장 등 쓰레기 집중 발생구역을 중심으로 쓰레기통(474개) 및 담배꽂초 수거함 설치
 - 스마트 IoT 가로쓰레기통 도입을 통한 수거 체계 개선(명동 등 시범 시행)



쓰레기통 + 센서부착



센서



적재량 및 넘침현상 모니터링



현장조치

- **유동인구 밀집지역 집중관리**를 통한 취약지역 청결도 제고
 - 클린존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고밀도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
 - 관광특구 및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365청결기동대 확대('25년 80명→'26년 100명)
- **시민참여 확산**을 통한 일상 속 클린 도시 서울 조성
 - (클린데이 추진) 3~11월 넷째 주 수요일 가로쓰레기 수거 및 청소 실시
 - (줍깅캠페인) 연 1회('25년)→연 4회('26년) 분산 실시 통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
 - (무단투기 근절) 일회용컵, 담배꽂초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캠페인 등 실시

5-2

도시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

생활환경과장: 박상준 ☎2133-3720 실내공기관리팀장: 김나연 ☎3625/ 환경분쟁조정팀장: 이주현 ☎42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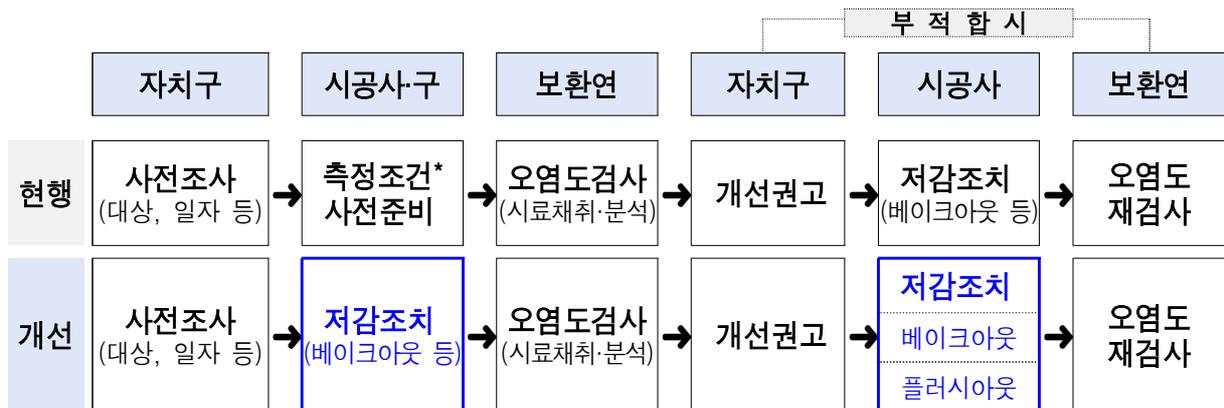
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위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·소음·악취 등 생활공해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

□ 사업개요

- 실내공기질 안전성 향상 위한 오염도 검사 강화 및 석면 안전 관리 제고
-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,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생활 소음·악취 저감
- 사업예산 : 2,019백만원 (실내공기질 100, 석면 547, 소음 950, 악취 422)

□ 추진계획

- **신축 공동주택 본검사 이전 저감조치 확대 시행**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


* 측정조건 : 30분 이상 환기 후 5시간 이상 밀폐, 실내온도 20°C 이상 유지 등

- **초미세먼지 유지기준 강화 시설군** 오염도 검사 확대(시설군별 5% → 40%)
 - 박물관(39), 미술관(12), 대규모점포(333) 384개소의 5%(20개소)→40%(154개소)로 확대
 - ※ 도서관(40), 학원(132)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침에 따라 5%(9개소) 검사
- **직화구이 음식점** 등 생활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지원
 - 악취 저감 시설 설치·운영 시 유지관리비 지원 (86대, 30~40만원/월)

5-3

환경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

생활환경과장: 박상준 ☎2133-3720 생활환경팀장: 장지선 ☎3722 담당: 김유정, 이영길 ☎3723

환경공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
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대시민 청소서비스 향상

□ 사업개요

- 환경공무원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휴게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지원
- 사업예산 : 2,008백만원(휴게실 900, 소통·후생복지 958, 임금체계 개편 용역 150)

□ 추진계획

- 환경공무원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등 **안전관리 강화**
 - 쉼 구 대상, 시·구·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 제거(5~6월)
 - 직영·대행업체 대상, 시 주관 작업 수칙 위반 근절 안전교육 추진(4월, 9월)
 - 3인 1조, 주간작업 원칙 준수를 위한 자치구 여건 정비 및 시범 운영 검토
- 환경공무원 휴게실 개선을 통한 **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**(3월, 9억)
 - 위생시설(화장실·샤워실·세탁실 등) 개선 우선 및 대행업체 휴게실 집중지원 등
-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**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용역 추진**(3~11월, 1.5억)
 - 수당·상여금 중심에서 기본급 중심의 단순·투명한 임금체계 전환 등
- 환경공무원 산업재해 예방 및 사기진작을 위한 **후생복지·소통 지원**
 - 명절 격려, 휴양소 지원, 안전교육 프로그램(직영, 대행) 등 후생복지 지원(1월, 8.5억)
 - 환경공무원 노고 격려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시 주관 한마음 축제 추진(3월, 1억)

IV.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

□ 총 괄

-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78건
- 조치내역

구	분	계	완 료	추진 중	검토 중	미반영
계	계	78	18	60	-	-
	시정·처리요구사항	45	5	40	-	-
	건의사항	25	5	20	-	-
	기타(자료제출 등)	8	8	-	-	-

시정·처리 요구사항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서울시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이 가장 크지만, 예산 편성은 교통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예산 편성 간에 괴리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, 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 건물 부문 예산 반영을 위한 관련 부서 지속 협의 ○ 비주거 민간건물 대상 제도개선 집중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로에너지건축물, 녹색건축인증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연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,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-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도입 운영('24.5~) - 건물 모의 탄소시장 거래('25.9~) ○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, 보조금·융자 지원, 컨설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7년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관 협조 요청 : '26년 하반기 ○ 민간건물 대상 신고·등급제 참여 확대 추진 ○ 저탄소 건물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·신규 발굴
<p>○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자치구 자체와 서울시 합동으로 과대 포장 점검 및 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는 업체들이 많아 효과가 미비함.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대 포장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참여형 정책을 추진 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대포장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자발적 준수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통·제조업체 대상 과대포장 기준 안내 및 판매제품 점검 및 관리 - 언론매체 활용, 포장재 감량 홍보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6년 설 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 및 관리 강화 : '26.2월~ ○ 보도자료, 유튜브·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과대포장 기준 및 친환경 포장 가이드 홍보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에코마일리지 전용 앱 미비, 홈페이지 연동 불가 등 사용자 접근성 낮아 MZ세대의 확대가 미흡함.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·체험형(게이미피케이션) 요소를 도입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젊은 세대 및 다양한 연령대 참여 확대를 위해 녹색실천 마일리지 신규 도입 및 참여형 요소 추가('26.1월 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녹색실천 마일리지) 음식물쓰레기 감량·폐비닐 분리배출 등 - (참여형 요소) 에코 퀴즈(매주 화요일), 해치 캐릭터 수집 (퀴즈 성공 시 제공) ○ 홈페이지 개선('26.1월 1차 개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색실천 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메뉴 구성 개편 - 젊은 세대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색 실천항목 운영 및 신규 발굴 : '26.1월~ ○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개선 : '26.7월~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, 모바일 환경 최적화 홈페이지 개발, 녹색실천 마일리지 운영 시스템 개발 등
<p>○ 기후부의 탄소중립 인센티브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된 상태임. 향후 통합 시까지의 운영 공백 방지 및 예산 연계 방안 마련하고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내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물 및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서울시 자체 지속 운영 ○ 시민 편의 증진에 유리한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후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통합 추진(점진적 통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'26년) 탄소중립포인트 평가기준을 적용한 에코마일리지 (승용차) 개선제도 시범운영 및 기존 회원 전환 - ('27년)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재원 구조 통합 - ('28년) 제도 통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제도 시범운영, 기존 회원 전환 ○ 기후부 통합 실무협의 : '26년 상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방안, 관련 규정 개정, '27년 회계연도 국비 반영 등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명동 관광특구의 쓰레기 관리 체계가 부실함.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 가로 쓰레기통 부족과 청결 관리가 미흡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동 거리가게 ‘쓰레기 받아주기’ 활용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6년부터 중구청 거리가게 허가조건 강화를 통해 ‘쓰레기 받아주기’ 표지판을 확대하여 시인성 확보 ○ 인력지원을 확대하여 청결 관리 및 단속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 365 청결기동대 : 12명 → 20명 확대 지원 - 무단투기 단속원 : 0명 → 6명 신규 지원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주요 도심 클린존(명동, 홍대, 성수) 지정을 통해 청결도 제고 : '26.2월~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결기동대를 활용한 가로쓰레기통 전담 관리제 시행 - IoT 가로쓰레기통 시범 설치를 통해 효율적 관리 추진
<p>○ 시민과 관광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줍깅 캠페인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표지판 및 카드 등으로 홍보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전역 클린데이 운영 시 줍깅 실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하여 줍깅 실천 확산 - 연 4회(분기 1회) 서울시와 함께하는 줍깅캠페인 실시 ○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줍깅 캠페인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, 동호회(민간단체)를 중심으로 줍깅 주간(9월 셋째주)에 25개 자치구 줍깅 캠페인 동시 실시 ○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다국어 (영·중·일) 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동 관광특구 내 스마트 미디어폴(30기) 및 거리가게 활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국어 안내 및 홍보 : '26.1월 ~ ○ 줍깅 캠페인 운영 : '26.3월 ~ ○ 자치구 클린데이 운영 : '26.4월 ~ 11월 셋째주 수요일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가 민간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.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전부개정안 국회 상정*(’24.8.30.발의) *계류 중(’26.1월말 기준) -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이행실적 제출(에너지 신고의무),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자 과태료 부과 ○ 소관위원회 변경(중소벤처기업위원회 →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/’25.10.28.)으로, 개정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중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-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개선 협의 : ’26년 상반기
<p>○ 연도별 신고·등급제 목표를 자체 설정하기보다 전체 대상 건물과 참여 가능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’26년 목표를 공격적으로 정하되 자율참여임을 감안하여, 공공, 민간건물 차등 현실적 목표 설정(전체목표 50~60%) - 신고·등급제 참여율 : (공공) ’25년 71% → ’26년 75% (민간) ’25년 29% → ’26년 40%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’26년 신고·등급제 추진계획 수립 : ’26.2월 ○ 신고·등급제 추진 : ’26.5월 ~ 12월 ○ 신고·등급제 결과 보고 : ’26.12월
<p>○ A~E등급 평가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 절감량 등 정량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단년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A~E등급 평가 시행 중 ○ 신고·등급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- 신고된 에너지 사용량 기반으로 ‘연차별 건물 에너지 사용증감량’ 분석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·등급 시스템 개선 : ~’26.10월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등급 공개를 거부하는 건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, 공개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법령에 건물의 에너지 등급 공개 규정 없어 참여자의 공개 유무 자율 선택에 따라 등급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, 등급 공개에 ‘미동의’ 경향 ○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를 통해 ‘등급 공개’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공개율 제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(또는 시행규칙)에 ‘건물의 목표에너지효율달성도 공개 가능’ 조항 신설 - 市 조례에 공개항목, 방법, 예외사항 등 구체적 조항 신설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-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개선 협의 : '26년 상반기
<p>○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음.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실가스 총량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 제1항·제2항」 개정 추진 중('24.8.21. 발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현행) ‘에너지 소비 총량’ → (개정안) ‘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총량’ ○ 온실가스 총량제 지자체 권한 이양 관련 유관기관(국토부, 한국부동산원, 국토안전관리원) 협의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 시 : '25.2.14. / '25.3.11. / '25.7.11.(총 3회) - 내 용 :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2조」에 ‘시·도지사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권한’ 조항 신설 협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-국토부, 유관기관 등 지속협의 : '26년 상반기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건물 에너지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 용도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용역 시행 중(~'26.5월) ○ 국토부 및 산하기관(한국부동산원, 국토안전관리원)과 건물 에너지 표준평가기준 일원화 및 건물에너지 데이터 확보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 용도별 표준평가기준 마련·시행 : '26.5월~ ○ 市-유관기관(국토교통부, 산하기관) 협의 : '26년 상반기
<p>○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으로는 폐기물 감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 관리를 통하여 분리배출 확대 및 감량효과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체 처리 전환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가 배출자의 분리배출 강화·혼합배출 감소 유인으로 작용 ○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 관리 강화로 분리배출 유도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처리 → 자체 처리 전환 사업장에 대한 관리·점검 실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 처리 전환 대상 사업장 지속 발굴 및 현장 점검·지도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수치상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보다 생활폐기물 자체 총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구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존) 공공처리시설 할당량 대비 반입량* 감축률 → (변경) 전년 대비 총처리량 감축률로 개편하여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 * 공공처리시설(소각·매립) 반입량 + 민간 소각량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개편 시행 : '26.1월~ ○ 자치구 대상 평가기준 변경사항 안내 및 감량·재활용 우수사례 확산
<p>○ 독려 수준인 분리배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 및 사업 확대 ○ 재활용가능자원(종이팩, 핸드타월 등)의 배출-선별-처리 단계별 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재활용 활성화 ○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 대시민 홍보 강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: '26.1월~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함. 단속원을 늘리는 단속 중심에서 주민 홍보·계도 등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강구 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줍깅 캠페인 추진으로 시민참여·홍보 강화 통한 시민인식 개선 및 무단투기 예방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 줍깅 캠페인 연 4회(분기 1회) 실시 - 시민, 동호회(민간단체)를 중심으로, 줍깅 주간(9월 셋째주)에 25개 자치구 줍깅 캠페인 동시 실시 - 줍깅 및 시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○ 무단투기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영상 제작 및 지하철역사, 공공 전광판 등 게시 - 카드뉴스 제작 및 시 홈페이지·온라인매체 표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단투기 인식제고 지속 홍보 : '26.2월~ ○ 자치구 클린데이 및 줍깅 캠페인 운영 : '26.3월~
<p>○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감축 목표(50%)가 2년 연속 달성되지 않은 만큼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4년 감축실적은 '22년 대비 22.3% 절감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 대면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축 성과 -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: 시민 참여 회의 및 홍보 시 종이 선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종이 사용량은 지속 감소 중이나,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태블릿PC 보급 등이 미흡하여 직원 등 불편 발생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종이감축 실적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: '26.2월~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시·사업소) 종이구입 예산 삭감, 반기별 실적 점검 - (자치구) 자체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- (산하기관)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, 실적 점검 및 평가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1인당 종이 사용량 10% 감축 목표는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맞춤형 감축 방안 마련 등 관리 지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들이 참여 가능한 현실적 목표(연 10% 감축)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2년 대비 2년간 22.3% 감축 실적 고려하여 산출 ○ 부서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지표 재설정 추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특성에 맞춘 목표 재설정 추진 : '26.2월~ ○ 기관별 감축 실적 점검, 미흡 부서 개선 유도 : '26.7월~
<p>○ 종이 감축 실적과 예산, 온실가스 감축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부서에 예산 반영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실가스 배출량 : 종이 1장 인쇄시 24.48g CO₂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생산 2.88g, 인쇄 21.6g, (환경부 백서) ○ 연 10% 감축시 온실가스 753톤/CO₂ 감축 효과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시·사업소·자치구) 실적점검·평가 후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공유 등 : '26.11월~ ○ (산하기관) 감축실적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지 점수 반영
<p>○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'25.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포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가 자문 및 대시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시기 결정 및 시범 운영 실시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및 4등급 경유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색교통지역 4등급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예산 편성(5억원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운행제한 시간 조정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 ○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록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시 추가보조금(100만원/대)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<p>○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장애인차 및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저소득층,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차 및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생계형 차량(저소득층, 소상공인)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市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)
<p>○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전에 시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충분한 제도 기간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것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'25.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포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가 자문 및 대시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시기 결정 및 시범 운영 실시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은평환경플랜트는 타 시설에 비해 폐기물 처리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과다함. 적자의 50% 지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평구는 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비가 과다한 열용융 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변경하는 대보수 사업 추진 중 ○ 市는 조례에 따라 은평구에 시비(사업비의 80%)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은평환경플랜트 대보수 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업개요) 48톤/일 (열용융방식 → 스토커방식) - (사업비용) 298억원(시비지원 237억원) - (사업기간) '24.10월~'28.12월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은평구의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시비 지원예산 지급 - '26년 설계비 총 13억원 중 10억원 시비지원 예산 편성
<p>○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법상 영향권 외 주민은 포함 불가하나 법 이외 별도 대화 기구 구성 등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을 포함한 ‘대형공사 주민협의회’ 를 활용하여 상시 소통 창구로 운영·소통 강화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대형공사 주민협의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근 거)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- (구 성) 주민대표·지역의원·전문가·市 공무원 등 20인 이내 구성 - (기 능) 조례상 공사 과정의 안전대책, 부실공사 방지 대책외 시설 건립 관련 주민 우려 및 요구 사항 전반으로 안건 확대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발족 및 운영 : '26.5월~ - 반대단체, 조건부 찬성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구성, 주민대표성 확보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은평환경플랜트는 음식물 혼입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관로 부식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 수거 체계를 도입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5년부터 음식물 수거 RFID용기 점진적 도입, 음식물 분리배출 체계 마련 - (은평구) 뉴타운(17,000세대) 음식물 수거 RFID용기 설치 추진 → '25년말 기준, 3개 단지(712세대) 12대 설치 완료 - (서울시) RFID 용기 구매 시비 지원(100%) 교부(350대분, '25.6월) ※ 생활환경과에서 RFID 종량기 보급 사업으로 시비 지원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FID 용기 설치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
<p>○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 미래 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·미래세대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소중립·기후위기 정책 방향 및 연구 등을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·운영('22.7월~) - 기후 리스크 예측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,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업 및 정책연구를 지속 추진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운영기관) (재)서울연구원 - (지정기간) '22.7.22. ~ '28.12.31.(6년 5개월) - (지원예산) '22년 2억, '23년 4억, '24년 4억, '25년 6억 - 주요 추진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·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및 고도화 ·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전망, 기후위기 적응특별대책 연구 등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6년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 운영(지원예산 : 6억원) -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, 서울형 탄소시장 운영 방안 마련 등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시민이 기후환경본부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닌 기후 의제 중심의 홍보·캠페인을 강화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제로서울’ 브랜딩을 통해 본부 사업 홍보 시너지 제고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※ ‘제로서울’ 브랜딩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물 부문 에너지 전환수송 부문 친환경 전환으로 탄소배출 제로 - 마을버스·청소차 탈 경유화로 미세먼지 제로 - 재활용률 제고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폐기물 제로 등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기념일 연계 홍보 및 기후·환경 미션 실천 캠페인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구의 날 기념행사, 환경상 시상식 및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‘탄탄제로 챌린지’ 추진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색서울시민위원회,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후 의제 발굴 및 시 환경정책 성과 연계 추진 ○ 기후 관련 의제에 따른 시의성 있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제별 맞춤형 온·오프라인 홍보 병행
<p>○ 단순 행정 수행을 넘어 AI 기반 기후위기 예측 연구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탄소중립지원센터 통해 기후위기 예측·대응 연구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기반 서울시 에너지 취약 가구의 폭염 리스크 예측 및 맞춤형 지원 방안(’25.4월~12월) - 기후위기 대응 한강 녹조 관리를 위한 AI 체제 전환 방향 연구 등(’25.1월~10월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연계 통해 AI 기반 고도화 연구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울시 취약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연구 : ’26.3월~10월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비흡연자 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하여 담배 제조사 재원을 활용한 흡연 쉼터 및 필터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민건강국 소관 사항으로 WHO FCTC 흡연시설 관련 조항 개정 검토 및 흡연시설 설비 시 제연 설비 강화 추진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시민건강국 검토 의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담배 제조사 재원 활용 및 관련규정(WHO FCTC 제5조 제3항 및 관련 가이드라인) 개정 : 담배업계와 협력하여 흡연시설을 적극 설치할 경우 흡연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2. 시설 기준 고도화 : 흡연부스 설치 시 시설 내에 제연 설비 기술 발달을 감안한 최신 설비 도입 통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추진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흡연부스 설치 시 최신 설비 도입 통한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추진(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) ○ 담배꽂초 수거함 설치 및 무단투기 단속 지속 시행
<p>○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할당 시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치구에 차년도 반입 용량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, 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활용률은 미반영되어 있으나, 자원회수시설(4개소) '26년 총 반입 할당량 확대로 자치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지원 - 반입 할당 총량은 시설별 노후도 고려 및 가동 안전성 고려, 시설 소각 가능량으로 산정해 '25년 대비 5%(30천톤) 증량 - 자원회수시설 입지구 발생폐기물 처리량 우선 확대 <p>※ 매년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를 통해 배출수거·재활용 확대 분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(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협업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폐기물 처리가 안정화된 후, 폐기물 반입 현황을 분석하여 할당량 재조정 시 재활용률 등 반영 검토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, 자치구별 안전관리 개선이나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활용시설 안전·근로환경 개선 집중 지원(3,892백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원대상) 11개 구, 12개 시설(선별시설 11개, 음식물 1개) - (지원내용)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*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소화전 등 소화시설 등 개선, 냉난방기 등 근로자 휴게실 개선 ○ 자치구 성과평가를 통한 선별시설 안전관리 이행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별효율, 고품질 선별, 시설개선, 시설안전관리 등 평가 - 우수 자치구에 포상금 지급(10백만원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공공선별시설 성과평가 후 우수 자치구 포상금 지급 (10백만원) : '26.3월 ○ 재활용시설 안전·근로환경 개선 모니터링 : ~'26.7월
<p>○ 반복되는 환경기초시설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작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(자원순환과, 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p>< 자원회수시설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고원인) 한정된 대정비 기간(평균 60일) 집중 작업 등 ○ (점검방안) 대·소정비 기간 특별점검(3일 주기) 및 市 중대 재해 사고사례(중대재해과 작성) 전과교육 실시 <p>< 재활용시설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고원인) 설비 노후화 및 안전장치 미비 등 ○ (점검방안) 인명사고 중심 시설 안전·근로환경 실태 점검 및 미비·개선사항 자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업 시스템 및 안전·근로환경 등 점검 지속 추진 ※ (재활용시설) 분야별 안전점검* 및 시설 간 교차견학 정례화('26년~) *소방기계설비산업안전 3개 분야 전문가와 시·구 담당 부서 합동점검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도 바닥재가 늘어난 것은 소각시설 노후화 또는 불완전 연소 때문이므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절대적 바닥재 양이 소폭 상승했으나, 소각량 대비 바닥재 발생률*은 최근 3년간 거의 같은 수준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3년 13.4%, '24년 13.4%, '25.10월 13.7% ○ 불완전 연소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으로 측정, 최근 3년간 강열감량* 또한 관련 법정 기준 내 수치로 측정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4개 시설 평균) '23년 3.87%, '24년 3.81%, '25년 3.95% ※ 강열감량 : 소각잔재물 중 미연소 가연성분의 잔존량 기준 10.0% 이하(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11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산화탄소 실시간 측정, 매일 1회 강열감량 측정 등 데이터관리를 통해 불완전연소 발생 지속 감시·관리
<p>○ 소각재 재활용 MOU 체결 후 추진 성과가 미미함. 현재 진행 중인 MOU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·관리하여 정책화하고 MOU 종료 후에도 소각재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것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민간주도에서 서울시, 태백시 등 공공주도로 전환, 사업지속을 위한 협의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기존참여) 서울시, 태백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- (신규참여)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강원테크노파크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협약기간('22.10. ~ '25.10.) 만료로 주도업체(SK에코플랜트) 및 기술사(위드애크) 참여 중단 표명 ※ 사업지속을 위한 기술개발까지 최소 4년 소요 예상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개발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, 우선 위탁용역을 통해 소각재 전처리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 달성 후 재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원시설 바닥재 재활용처리 추진 - 노원시설 추진결과 검토 후 양천시설까지 재활용 확대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권고기준 초과율이 증가하고 있어 검사 강화 및 베이킹아웃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,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가 조치 실행이 어려워 실내공기질 관리 및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절차 개선 추진('25.9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염도 본검사 이전에 '베이킹아웃' 실시 및 청년주택에 대해 '플러쉬아웃' 적극 권고 ○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영상물 제작('25.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베이킹아웃'과 '플러쉬아웃' 방법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및 게시 ○ 실내공기질 관리법령(기후부) 개정 건의('25.11.2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염도검사 부적합 시 재검사 및 개선권고 시행 근거 신설 -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해 자가측정과 동일한 게시 의무 신설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염도검사 절차 개정안(저감조치 확대 시행) 시행 : '26.1월~ ○ 관련법령 관리기준 상향 건의 : '26.2월~3월 ○ SNS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: '26.4월~6월
<p>○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한 중금속 미세먼지와 한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기질 영향, 잔류물에 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므로 인근 자치구에도 관련 지침을 확대 적용할 것 (대기정책과, 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꽃축제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(보건환경연구원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※ 불꽃축제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모니터링) 이동측정차량 3대(여의도, 이촌, 노량진) 운영 및 인근 도시대기측정소(영등포, 용산, 마포 등) 자료 분석 - (측정결과) 일시적 고농도 초미세먼지 (최대 427$\mu\text{g}/\text{m}^3$) 발생,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(납·비소·카드뮴) 미검출 - (분석의견) 불꽃 행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초단시간으로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 및 과학적 근거 불충분 </div> ○ 자치구·유관기관에 협조 요청(공문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 영향 범위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유의 안내 ※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 자치구·민간 주최 행사는 폐기물 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권고대상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꽃행사 전·후 모니터링 실시 및 자치구 등 지속 협조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전기이륜차 보급은 작년 대비 예산을 2배 편성했으나 성과와 충전 편의성 부족으로 실적 및 예산집행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(친환경차량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5.12.31일 기준 전기 이륜차 3,788대 보급(전년 대비 49.7% 증가)하고, 예산액의 80.2%(8,402백만원)를 집행함 - '26.2월 중 출고지연으로 이월된 441대(1,342백만원)까지 보급 시 최종 93.0% 집행 예정 ○ 전기이륜차 성능개선을 위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○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(150기)을 확대 설치하여 충전 편의성 제고
<p>○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구체적 대응 전략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므로 법 취지에 맞춰 지역 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포함한 서울형 분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것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영향 분석 연구(서울연구원)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-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- 서울시 전력 외부 의존도 완화 방안 모색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력자립을 기반 강화하면서 서울의 구조적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분산에너지 확대 도모 - 지열, 수열, 연료전지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-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사용량 감축 추진 ○ 차질 없는 서남2단계 건립 추진으로 지역단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현재 서울시 전력 자립률이 약 10%로 정체된 상황에서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○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및 설비기준 안전 강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심 여건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려한 신기술 태양광 등 적극 지원하여 전력자립률 제고
<p>○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에도 43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이고 서울시는 기후부에 건의하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. ESS 화재 위험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서울시는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SS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기술 및 인력 등 지원 요구('25.2월, 산자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중인 시설의 방화 및 시설보완에 필요한 재정지원 - 미설치 시설 대상 재정지원, 기술 및 인력 지원 등 ○ 공공기관 ESS 설치 및 운영 현황 지속 현행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SS 설치 대상 기관의 설치현황 조사·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ESS가 실질적인 역할 가능하도록 기후부 제도개선 적극 건의 ○ ESS 설치 확대 위한 기후부 법령개정* 시 이에 따른 조치 시행 <p>* 기후부, 법령상 설치 의무기한('25.12.31.) 연장이 아닌 실제 ESS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중('26.1월)</p>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집행이 모두 부진한 만큼 실현가능한 보급 목표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보급목표)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현실화 추진 검토 중 ○ (예산집행) '26년 세출예산 규모 사업 수요에 맞게 조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예산 집행률 관리 철저 - 단순확대가 아닌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급목표 조정 - 주기적인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연계 강화
<p>○ 재생열(지열)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사업은 착공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실적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 지원조건 완화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'26.1.20.) ○ 건축심의(재생열 협의) 목록 토대로 사업대상지 발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25년 의무화 시행으로, '26년부터 대상지 본격 착공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진행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설치기한 확대, 불가피한 공사지연 인정 등 지원조건 완화로 예산집행률 제고 ○ 사업대상지 홍보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 참여 독려

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	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○ 스마트서울맵 내 폐배터리, 폐의약품 수거함 정보 제공 오류 및 관리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2차전지 수거함 위치도 등록할 것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區) 폐의약품 수거함 점검 및 정보 현행화 실시('25.8월/11월) ○ (市) 폐배터리 및 폐의약품 수거함 현장점검 실시('25.11월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25개 자치구 총 250개소(폐배터리 125, 폐의약품 125개소) - (내용) 잠금상태, 위치 정확성, 관리상태, 수거상태 등 - (결과) 잠금불량, 위치 불일치, 과다적치 등 적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배터리, 폐의약품 수거함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 및 적정 조치 요청 : '26.1월~3월 - 자치구 관내 수거함 일괄 정비 및 스마트서울맵 정보 현행화 ○ 스마트서울맵 '2차전지 수거함' 테마 신규 등록 : '26.2월
<p>○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은 업종 변경으로 유지관리비 지원이 줄고 설치 소요 기간이 길어 신청 철회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을 저조하므로 사업 실행력을 높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치지원 사업방식 변경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에서 설치까지 추진기간 단축하여 사업 참여부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기존) 전년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→ 당해연도에 시설 설치 ▶ (변경) 전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→ 당해연도에 市 공모를 통한 대상선정 및 시설 설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계획 수립 : '26.2월 ○ 지원대상 공개모집 : '26.3월~4월 ○ 지원대상 심의 및 시설 설치 : '26.5월~9월 ○ 시설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: '26.10월~12월

건의 사항

건의 사항	조치 결과
<p>○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 부문의 감축 정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장기적 전략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시행을 통한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주거 민간 3천㎡ 이상, 공공 1천㎡ 이상 건물 대상 ※ 비주거 건물(3천㎡ 이상)은 전체 건물 수의 2.3% 이나,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1.8% 차지 ○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, 보조금·융자 지원, 컨설팅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건물 대상 신고·등급제 참여 확대 추진 ○ 저탄소 건물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신규 발굴
<p>○ 에코마일리지 민원 처리 시 조치 결과가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민원 유형별 분석과 공감 및 성의 있는 답변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답소 민원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 특성 반영하여 민원 유형 세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민원(문의·정보수정·신청처리), 제안, 고충민원 ○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한 응답소 답변 표준안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 민원요지 확인 → ② 공감표현 → ③ 조치 내용/근거 설명 → ④ (필요시) 향후계획 안내 → ⑤ 담당자 연락처 안내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원 분류 및 답변 체계 강화기준 시행 : '26.1월~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단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문화 중심의 청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전체로 줍깅 캠페인을 확대하여 시민의식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하여 줍깅 실천 확산 - 줍깅 활성화를 위해 25개 자치구 줍깅 캠페인 동시 실시 ○ 시민, 동호회를 중심으로 줍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와 동호회 협업, 줍깅 물품 및 홍보용품 지원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줍깅 캠페인 운영 : '26.3월~ ○ 자치구 클린데이 운영 : '26.4월~11월 셋째주 수요일
<p>○ 건물 에너지 신고·등급제(기후부)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(국토부)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, 서울시 차원의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하기 바람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신고·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 시행 중이나, ○ 중앙정부는 부처별 별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분리 운영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고등급제/기후부)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평가 - (총량제/국토부) 건물 에너지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 ○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에 제도개선 요청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원화 관련 중앙부처(기후부, 국토부) 건의 : '26년 상반기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민간 건물주가 신고·등급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컨설팅 및 용자 상담 등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·등급제 참여한 C-E등급 건물 컨설팅, 용자 지원 중 ○ 정부부처(산업부, 국토부, 기후부) 기금 사업 등 가용가능 국비 연계사업 추가 발굴 ○ 에너지 관련 기관(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전력공사 등) 지원사업 연계 발굴을 통해 민간건물에 직접지원 가능한 방안 마련 ○ 시민 인식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설명회 지속 추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부처 국비 연계사업 발굴 협의 : '26년 상반기 ○ 에너지 관련 기관 지원사업 협의 : '26년 하반기 ○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추진 : '26.6월~9월
<p>○ 중소형 건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형별·규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(친환경건물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형건물 관리자 지원을 위한 '에너지관리 매니저*' 양성 ('25.9월) 및 건물 운영관리 지원 * 전문기관 용역 ○ 건물 관리자의 건물 자가진단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'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' 책자 및 영상 제작 중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성된 '에너지관리 매니저'를 건물에너지 현장실태조사 인력으로 활용 : ~'26.4월 ○ 가이드라인 책자 및 영상 배포 : '26년 상반기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환경공무원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급 임금 자치구 부담액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공무원 인건비는 자치구 부담원칙이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검토 ○ 서울시 도로의 차도·보도 가로청소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소급임금 총액(3,307억원)의 27% 범위내 자치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자립도(60%) 및 소급임금(40%)액을 감안 자치구별 차등지원 <p>※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1억 기 교부('25.12.24.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추가 지원 검토
<p>○ 임금 개편 전까지 현 임금수준 유지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업무 환경개선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 시 임금체계 개편 전까지 현 수준 유지를 합의('25.7.31.)하였으며, 자치구 여건에 맞게 초과 근로시간 조정하여 유지(평일 근무 현행 유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 인원 업무 재배치, 명절 등 부득이한 휴일 근무는 협의 조정 ○ 환경공무원 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('26.3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계약 발주 및 계약(2월), 용역 추진(3월~10월) - 착수보고(3월), 중간보고(7월), 최종보고(10월) ○ 市-노조 간 용역결과에 따른 임금 및 근무 체계 개편 합의 추진(10월~11월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임금체계 개편 : '27년~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수도권매립지 공모 및 확보 과정이 서울시 폐기물 감축 정책과 연계되지 않음. 공모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(자원순환과)</p>	<p>□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□ 추진내용</p> <p>○ 「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(’23년~’27년)」* 수립하여 감량 정책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임</p> <p><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활용 활성화로 종량제 폐기물 감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가 대상 폐비닐 별도배출 체계 구축(’24년 25만→’25년 61만 개소) ▶ 봉제원단 공용집하장 조성·운영(’24년~’25년 폐현수막 등 물류 확장) ▶ 숲 자치구 커피박 별도수거 체계 구축 완료(’25년) - 1회용품 다량 사용처 다회용기 도입·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서비스 지역 확대(’24년 15→’25년 20개구) ▶ 체육시설 내 다회용기 도입(’24년 잠실→’25년 잠실·고척 야구장) ▶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중단 및 다회용기 사용 도입 ※ ’23년~’25년 시립 장례식장 3개소, 민간 2개소(삼성서울병원, 중앙보훈병원) 시행 중 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상 신규 발굴 및 관리강화(’22년~) <p>< 공공 소각시설 확충 추진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완료(’24.10.) - 강남·노원시설 현대화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 용역추진(’25.2.~) - 은평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지원(’24.9.~) - 구로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(’24년~’28년)
<p>○ 시, 자치구, 사업소,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‘(가칭) 종이 절감 협약’ 도입과 기관별 우수 사례 공유 및 시상 등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□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□ 추진내용</p> <p>○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확대 추진계획 수립·시행(’25.4.28.)으로 시·자치구·사업소, 산하기관 참여 유도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시·사업소) 추진계획 통보 및 예산 10% 삭감, 실적 점검 - (자치구)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- (산하기관)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, 실적 점검 및 평가 <p>□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감축 실적 점검 : ’26.2월~ ○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추진 : ’26.7월~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전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단속 차량에 안내 문자 발송과 전방위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'25.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포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공해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자 발송 및 사전홍보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등급 차량 소유자 운행제한 안내문자 및 홍보문 발송 ○ 자동차 검사소(61개)· 정비소(361개) 등 운전자 접점 공간 활용 홍보 ○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‘조기폐차 설명회 운영’
<p>○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대책과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 바람 (자원순환과, 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소심 판결 이후, ‘대형공사 주민협의회’ * 의견을 반영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 소통 방안 도출 및 홍보 확대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주요 홍보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 성과 및 추진계획 - 기존 시설 대비 신규 시설 유해물질 배출 저감효과 등 안전성 -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지역명소화 등 편익성 </div> <p>* 주민대표·지역의원·전문가·市 공무원 등 20인 이내 구성,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소통창구 역할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협의체·대형공사 주민협의회 발족 및 운영 : '26.5월~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별·권역별 설명회, 온라인 설명회, 홍보물 제작·배포 등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공공폐기물 반입량 감소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. 민간 처리 분량까지 포함한 총발생량 감축 실적 평가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할당량 대비 총처리량 감축률 산정 시, 공공처리시설 반입량뿐만 아니라 민간 소각량도 반영 중('24년~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변경 : '26.1월 - (기존) 할당량 대비 반입량(공공+민간) 감축 → (변경) 전년 대비 총처리량(공공+민간) 감축 실적 우수구에 처리비 지원
<p>○ 미래의 기후 리스크 예측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관련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정기간) '22.7.22. ~ '28.12.31. (6년5개월) - (지원예산) '22년 2억, '23년 4억, '24년 4억, '25년 6억, '26년 6억 - (주요기능)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반에 대한 지문·용역 ○ 기후 리스크 예측 및 대응 등 관련 용역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('25.2월~'26.12월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및 관련 용역 시행 : '26.2월~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기후테크 산업은 신산업 및 인재 양성 분야 사업으로 AI 및 양자기술과 연계해 서울형 청년·스타트업 양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. 서울시가 기후테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(기후환경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운영, 기후테크펀드·실증사업 등을 통해 기후테크 기업 발굴·육성 및 투자연계 지원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테크 기업 지원 과정에서 AI·양자기술 적용 분야 발굴, 과제 단위 실증 및 사업화 연계 추진 ○ 경제실 AI·양자기술 인재양성과 연계한 청년·스타트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방안 검토
<p>○ 공용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관련하여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무산 사례와 같이 주택가 밀집 지역의 빛반사 및 경관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기술·안전 문제를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습침수구역 및 빛반사·경관 등 기술·안전 쟁점에 대해 기후부와 지속 협의 진행 중 ○ 기후부 재생에너지 정책 지역별 설명회 참석('26.1.14.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의무화 접수 시스템 개발 중으로 개발 완료 시 면제 신청 접수 예정 ○ 침수·빛반사·경관 등 기술·안전상 설치가 곤란한 사업지에 대해 검토 후 자체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요일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편차(월요일 집중 반입) 완화 필요하니 수거·운반 업체와 연계한 요일제 예약제 도입 등 물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회수시설(4개소) '26. 1. 1부터 요일별 할당량 부여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구 의견 반영하여 요일별 할당량 부여 및 할당량 준수 협조 요청 - 할당량 초과 반입 구는 향후 반입 제한 필요시 우선 제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일별 할당량 이행 결과 반영하여 분기별로 할당량 조정 ○ 자치구별 폐기물 발생, 수거, 적환 등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필요시 자원회수시설별 할당량 관리방안 변경 추진
<p>○ 서울시 주최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후원 민간 행사에도 폐기물 관리 의무화를 검토하기 바람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·유관기관에 협조 요청(공문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 자치구·민간 주최 행사는 폐기물 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권고대상 ○ 시·자치구·민간 주최 행사(1,000명/일 미만 행사 포함) 목록 관리를 통해 대량폐기물 발생 예상 행사 대상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적극 요청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관내 대형행사 현황 모니터링 : '26.2월~ ○ 분기별 지속 협조 요청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전기이륜차 보급·확대를 위해 보조금뿐 아니라 성능개선, 배달용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구별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설치하기 바람 (친환경차량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6년 전기이륜차 성능개선을 위해 주행거리, 충전속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○ 금융감독원에서 '26.3월까지 배달라이더 보험료 20~30% 인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6년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(150기) 시, 배달라이더 이동 동선, 설치장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자치구 간 균형있게 설치할 계획
<p>○ 도심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, 공공·민간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, 민간 참여형 인센티브 도입,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굴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차장)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○ (건물)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단계적 상향('26년 기준 전년 대비 0.5%p)으로 민간 보급 확대 ○ (분산형에너지) 재생열 의무화 도입('25.1월~)을 통해 건물(지역) 단위 소규모 분산형 열원 확대 공급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주차장과 같은 유휴부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지속 설치 확대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최근 3년간 신규 민간 자본 발전소 사업이 전무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전기요금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 영향분석 연구('25.8월), 전문가 자문회의('25.10월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남2단계 건립, 연료전지 확대 등 전력자립률 제고 노력 ○ 전기요금 관련 대도시 입지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 추진
<p>○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규 설치 시 안전기준 강화와 지하에 설치된 기존 충전 인프라는 이전 및 안전기준 보완을 추진하기 바람 (친환경차량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설치 의무화* 및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**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('23.11.21.) ** 전기안전관리법 개정('25.5.27.) ○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('25년 민간21억, 공공 7억) ○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설치기준* 마련·추진(소방재난본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」('24.7월 제정) 근거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2차전지 특성과 화재 대응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(자원순환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2차전지 담당자 및 현장 실무자 안전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자치구 담당팀장, 담당자, 집하장 현장 실무자 - (내용) 2차전지 특성, 분리배출 요령, 안전 보관 등 ○ 공동주택관리자 대상 2차전지 안전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내용) 2차전지 특성, 분리배출 요령, 분리수거함 관리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2차전지 담당자 및 현장실무자 교육 실시('26.3월/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 교육 실시 ○ 공동주택관리자 2차전지 안전교육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별 공동주택관리자 2차전지 안전교육 실시 ('26년 상·하반기)
<p>○ 전기집진기 설치의 효과와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 바람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집진기 오염물질 저감 효과 검증(보건환경연구원, '23.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성능평가 결과) 먼지 96%, 악취물질 60% 저감 ○ 市 지원대상 시설의 사후관리 실시(매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진필터 세척, 소모품 교체, 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유지관리 내용 확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사후 유지관리 점검 철저 : '26.1월~

건의사항	조치결과
<p>○ 환경공무원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(생활환경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 중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공무원 인건비는 자치구 부담원칙이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검토 ○ 서울시 도로의 차도·보도 가로청소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소급임금 총액(3,307억원)의 27% 범위내 자치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자립도(60%) 및 소급임금(40%)액을 감안 자치구별 차등지원 <p>※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1억 기 교부('25.12.24.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추가 지원 검토

기 타 사 항

자료제출 등 기타사항	조 치 결 과
○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역할과 권한 책임분담 관련 자료 (자원순환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○ 자료 제출 완료 ('25.11.4.)
○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 기준 및 자치구별 발생량 증감 원인분석과 인구수 고려한 할당량 검토 결과 (자원순환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○ 자료 제출 완료 ('25.11.18.)
○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 관련 별도 보고 (자원순환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○ 자료 제출 완료 ('25.11.18.)
○ 자치구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 방식 설계연구 자료 (자원순환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○ 자료 제출 완료 ('25.11.18.)
○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 단가 현황 자료 (자원회수시설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○ 자료 제출 완료 ('25.11.18.)

자료제출 등 기타사항	조 치 결 과
<p>○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소통 회의 결과 (자원회수시설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</p> <p>○ 자료 제출 완료('25.11.18.)</p>
<p>○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,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분석한 이동측정차량 자료 (대기정책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</p> <p>○ 자료 제출 완료('25.11.18.)</p>
<p>○ 대규모 정비사업 중 지열 활성화 관련 자료 (녹색에너지과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상황 : 추진완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</p> <p>○ 자료 제출 완료('25.11.4.)</p>